



Left21.com

2010년 6월 5일 ~ 6월 18일 | 제33호 | 값 1,800원

레프트21

6.2 지방선거 결과

이제는 진보연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나라당이 참패했다. 강원도와 경남 등 텃밭에서마저 패배했다. 특히 이달곤, 정진곤 등 MB맨들이 줄줄이 낙선했다. 통쾌하다.

이명박의 주요 기반이라던 수도권에서도 한나라당은 패배하거나 고전을 면치 못했다. 오세훈은 가까스로 패배를 면했다.

김문수는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하나인 덕분에, 또 아마도 유시민이 국민참여당 후보로 나와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한 덕분에 그나마 수성할 수 있었다.

높은 투표율이 보여 주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 의사를 표출하기 위해 투표장으로 향했다. 특히 공식 정치에 대한 환멸 때문에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젊은 층들도 과거에 비해 적극 투표에 참가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년간 동안 추진한 경제 위기 고통 전가, 민주적 권리 공격, 4대강 삽질 등 친기업·반민주 정책들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것은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진정한 대중 정서를 반영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촛불이 꺼진 후 사람들이 보수화됐고 이명박의 친서민 중도실용이 먹

히고 있다’는 관측은 틀렸던 것이다. 반신자유주의 정서와 급진화는 여전히 물밑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경기 회복을 자랑해 왔지만, 재벌과 부자 들만 그 열매를 가져가고 대중엔 고통만 전가되는 현실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이미 몇 달 전부터 이명박 정부의 선거 패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우파 언론들 사이에서 나왔다. <조선일보>는 3월 말 “청와대에도 ‘이대로는 선거가 어렵다’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서가 연일 올라온다”고 보도했다. 여론조사에서도 ‘국정 안정론’보다 ‘정권 심판론’이 더 큰 지지를 얻었고 ‘개발과 뉴타운’이 아니라 ‘무상급식과 복지’가 핵심 선거 이슈였다.

이 상황에서 3월 26일 천안함이 침몰했고 곧이어 이명박 정부는 북풍 물의를 시작했다. 간첩 사건이 터져나왔고 한나라당 조전혁의 전교조 명단 공개도 이어졌다. 선거 패배를 모면하기 위해 보수층 결집을 시도했던 것이다. 이명박은 전쟁 기념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북풍 물의를 했다. 오바마 정부까지 “확고하고 분명한 지지”를 보내며 힘을 실어줬다.

▶ 2면으로 이어짐



이스라엘의 학살 만행 규탄한다

가자 지구 봉쇄를 풀어라!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 선단의 승선자들을 이스라엘 특공대가 살해했다. 이스라엘의 이번 행동은 팔레스타인 민중과 그 지지자들을 겨냥한 또 한 번의 테러 행위다.(관련 기사 4면)

이스라엘 특공대는 가자 민중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구호품을 가져가던 구호 선단을 월요일(5월 31일) 새벽에 습격했다.

특공대는 승무원들과 구호 요원들을 죽고 다치게 했다. 이스라엘과 그 지지 세력들은 이스라엘이 자위권을 행사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배에 대한 일체의 저항을 짓밟는 것이 진정한 의도다.

“이스라엘은 구호 선단을 고의로 공격했고 이러한 진실을 거짓 선전으로 가리려 합니다.” 가자

지구의 의사인 모나 엘 파라의 지적이다. “이스라엘은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구호 선박 중 하나였던 ‘마비 마르마라’ 호에서 벌어진 참극이 활동가들을 통해 처음 전해져 온 것은 화요일(6월 1일)이었다.

피의 호수

“갑판이 피의 호수로 변했습니다.” 터키 출신 구호 활동가인 님루파 세틴의 증언이다. 세틴은 이스라엘 군의 공격 직후 이스라엘에 구금됐다가 아이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터키로 송환됐다.

그녀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스라엘 군은 월요일 오전 네 시 경에 연막탄과 최루탄을 쏘며 작전을 개시했고 헬기를 이용해 갑판에 내렸다.

본국으로 송환된 그리스 출신 활동가 여섯 명은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활동가들이 [이스라엘 측이 들이치는 문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 과정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심하게 얻어 맞았습니다.” ‘프리 메디테라니언’ 호에 타고 있었던 아리스 파파도코스토폴로스의 증언이다.

‘스펜도니’ 호에 타고 있었던 그리스 출신 활동가 디미트리스 젤라리스는 “갑자기 사망에서 고무보트가 다가오더니 순식간에 중무장한 특공대원들이 배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배에 올라온 그들은 플라스틱 탄환을 쏘고, 사람들을 구타하고,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 2면으로 이어짐



구호 선단에 올라 구호 활동가들에게 총을 겨누는 이스라엘 군



남아공 월드컵

축구, 민족주의, 상업주의

▶ 13면

아프가니스탄 파병 임박

“지옥으로 가는 문”

▶ 6면

G20

IMF 개혁과 금융규제안이
해결책임가

▶ 10면

멕시코 만 기름 유출

“오바마의 카트리나”

▶ 6면

건강보험 보장성 논쟁

양보로 정부 공세를

막을 수 없다 ▶ 10면



세상을 움직이는

“천안함 절단면을 트위터 이용자 (20명)에게 공개할려고 합니다. ... 참여를 희망하는 트위터 이용자는 RT로 응모가 가능합니다”
국방부의 황당한 이벤트

“명절을 잘 쇠라는 뜻 ... 어떤 사람이 1백만 원을 주며 잘봐달라고 하겠느냐”
1백만 원은 뇌물도 아니라는 비리 교육감 공정택

“옛날 처칠 영국 수상이 큰 것들은 모두 국유화시켜서 물건이 큰 남성들은 국유화될까 봐 소변도 가리고 왔다”
한나라당 의원 손범규의 자질 발언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해도 그와 별개로 여당이 너무 세지는 것을 [국민들이] 염려한 것 ... 심판과 견제는 다르다”
아직 정신 못차린 한나라당 대변인 조해진

“너 나와” “열받은 건 피차 마찬가지”
개표 방송 보다 역살잡이가 벌어진 오세훈 캠프 풍경

“최고 전략사령관” 이명박 대통령 ... 전면전이 불가피하게 되더라도 우리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북의 도전 의지를 초기에 꺾는 방안은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논설위원 육정수의 정신나간 전쟁 선통

“우리는 무장장비에 번호를 매길 때 우선 기계로 새기고 ‘번’이 아닌 ‘호’를 쓰지 ... ‘번’자라는 것은 체육선수에게 쓴다. 그렇다면 이 추진체가 축구선수냐 농구선수냐”
북한 국방위 정책국 대좌 리선권

“내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사고 당시 비상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 것이다. 그래야 까부는 놈들을 잡아넣었을 것 아닌가”
국우익 김동길

“마르크스는 공산적 사회주의를 판하면서 자기 이론은 과학적 사회주의라 자부했다. ... 유독 국내 진보진영만 광우병 공포를 부추겼다 ... [천안함 사태에] 진보진영은 비과학적 가설에 기대고 국제적 흐름을 외면하고 있다. ... 무덤 속의 마르크스가 통탄할 일”
〈중앙일보〉논설위원 이철호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매주 월·금 저녁 7~8시

강남역 8번 출구 1백 미터 파리크라상 앞
신촌역 3번 출구 버가킹 앞
홍대입구역 4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명동 명동 예술극장 앞
건대입구역 5번 출구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입), 인사점 (건국대입), 풀무질(성균관대입), 이음책방(대학로), 녹두(동국대후문),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책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김민아 기자

MB 교육에 파열구를 낸 진보 교육감 후보 6월 3일 새벽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한 박노현 당선인이 선거 사무실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답하고 있다.

MB 특권교육에 맞선

교육 혁신 열망의 대승리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가 대거 당선했다. 당초 쉽게 당선이 예상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뿐 아니라 5명이나 더 당선해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등 무려 6명의 진보 교육감이 탄생했다! 인천과 부산은 아쉽게도 당선하지 못했지만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정부와 우파들의 광기 어린 북풍 물이와 발악적인 반전교조 공세도 더 나은 교육에 대한 열망을 잠재우지 못했다. 이번 선거로 국민의 대다수가 MB의 부자 맞춤형 특권 교육·무한경쟁교육을 거부하고, 무지막지한 전교조 탄압에도 반대한다는 것이 밝히 드러났다.

특히, 서울의 박노현 후보가 초박빙의 접전 끝에 우파 후보 이원희를 누른 것은 통쾌하기 짝이 없다. “교원평가로 교원 10% 퇴출”, “반(反)전교조”를 핵심 가치로 내건 이원희의 패배는 MB 교육과 전교조 마녀사냥에 치명타를 날렸다.

강원도 교육감(민병희)과 광주시 교육감(장휘국)에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 당선한 것도 뜻깊다.

통쾌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은 진보진영의 폭넓은 단결을 통해 이뤄낸 쾌거다. 일부 민주당 세력도 진보 교육감 당선에 기여했지만, 진정한 동력은 대중의 개혁 열망과 그에 부응한 진보진영의 광범한 단결이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은 정당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선거 전 〈조선일보〉등 우파들이 우려했듯이 MB 교육 정책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자사고 확대, 일제고사, 성적 공개, 교원평가제, 전교조 탄압 등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우파들이 이대로 순순히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머릿속을 온갖 보수적 쓰

레기더미로 채워 넣지 않으면 통치가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더욱이 이번 지방선거 전반에서 확인된 높은 반이명박 정서로 이명박의 정치 위기가 가속될 것이므로,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필요성은 더 커진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도 그런 필요를 드높인다.

선거 뒤에도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 대중에게 계속 전가할 것이므로 교육 복지는 여전히 뒷전에 놓일 것이다.

형편 없는 교육 여건의 책임을 떠넘기고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해 전교조 탄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민심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데 이끌이 난 우파들은 진보 교육감을 흔들기 위해 온갖 음해와 방해 공작 일삼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김상곤 교육감이 교발당했듯이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이용해 진보 교육감을 옥죄는 시도를 서슴지 않을 것이다.

부르주아 언론들은 ‘교육의 이념적 중립성’을 내세워 진보 교육감을 위축시키고 길들이려 노력할 것이다.

진보 교육감의 임무는 막중하다. 진보 교육감은 예상되는 탄압 위협과 이데올로기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선거 때 약속한 교육 개혁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교육계의 썩은 병폐를 도려내고 새로운 교육 개혁을 실행하는 과업이 단지 진보 교육감 6명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진보 교육감 당선의 일등공신인 진보진영의 결집이 선거 뒤에도 지속되어야 하며, 이런 결집을 통해서 더 광범한 대중을 결속시킬 때만 진보 교육감의 개혁 시도가 성공할 수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 때 보여 준 진보진영의 단결이 지속·강화되려면, 진보 교육감은 부르주아적 명망상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운동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며 운동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김상곤 교육감과 박노현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체로 진보적 교육 개혁의 과제를 잘 제시했지만, 몇몇 약점도 드러났다. 선거운동 막바지에서 진행된 수도권 교육감 후보 공동기자회견에서 임시경쟁교육 반대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대학입시 대응능력 강화’라는 내용이 포함됐고, 김상곤 선본은 〈조선일보〉에 그런 내용을 담은 광고를 내기도 했다.

이명박의 교원평가제를 좀 더 분명히 비판하지 않은 점도 아쉽다.

막중

전교조 탄압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치러진 선거에서 박노현·김상곤 후보가 전교조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방어하기보다 전교조와 거리를 두려는 인상을 준 것도 아쉽다. 특히 민주노동당 후원 문제로 1백 69명의 교사들이 파면·해임될 위기에 놓였는데, 한나라당의 이중 잣대만 비판하고 징계 여부는 법적 절차에 따르라는 논평을 낸 것이 그렇다.

교과부의 전교조 교사 대규모 해임 계획은 철회되지 않았다. 규약 개정 강요 건도 남아 있다. 앞으로 진보 교육감들은 전교조 탄압에 일관되게 맞서야 한다.

박노현·김상곤 후보 등이 현행 교원평가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만큼, 진보교육감은 교원평가제 실시를 중단시키고 학교 교육 환경 전반의 개선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 학부모단체들과 맺은 협약식에서 약속했듯이, 일제고사로 파면·해임된 교사들을 즉각 복직시키기 위해서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진보 교육감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운동의 대의를 방어하고 아래로부터 운동을 고무해야 한다. 진보 교육감 당선을 계기로 조직된 운동 세력들과 미조직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힘을 합쳐 즐거운 ‘교육 혁명’을 시작하자.

정진희

» 1면 선거 평가에서 이어짐

그러나 북풍 물이는 무리수였다. 특히 젊은층 사이에서 오히려 역풍을 부른 듯하다. 젊은 층은 선거 직전 여론조사들에서 한나라당이 크게 앞선 것으로 나오면서 다소 의기소침했을 법한데, 그럼에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심정으로 투표장으로 갔던 듯하다.

실제 이명박 정부의 북풍 물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1990년대 이전의 냉전 상황으로 회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했다.

뒤늦게 이명박은 북풍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때는 늦었다.

북풍과 노풍

매섭게 인 반이명박 파고의 수혜를 입은 것은 민주당이다. 한나라당은 ‘과거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민주당 집권 10년의 부정적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중적 반감에 기대어 ‘노풍’이 불었다. 노무현의 ‘좌회정’ ‘우파재’라 불리던 안희정과 이광재, ‘리를 노무현’ 김두관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한명숙도 초반 열세를 딛고 오세훈을 바짝 따라잡았다. ‘노풍’이 ‘북풍’을 이긴 셈이다.

강력한 반이명박 정서가 한때 “폐족”으로 몰렸던 친노 정치인들을 부활시킨 것이다. 그것도 겨우 2년 만에 부활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민주당을 흔쾌하게 지지한다고 보긴 어렵다. 〈한겨레〉는 “야당이 진정으로 좋아서 표를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여권 독주에 대한 견제심리가 발동하면서 반사이익을 건졌다는 분석이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도구로 시민들이 [민주당을] 일시 활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선거 패배로 이명박 정부의 집권 하반기 내리막길은 이제 본격화할 것이다. 〈조선일보〉고문 김대중은 “MB정권의 유효성을 어느 정도 연장시키려면 지방선거의 승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거기서 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제 권력누수가 심해지고 세종시나 개헌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부의 아귀다툼도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 고통 전가 노력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남유럽 재정 위기가 보여 주는 ‘더블 덩’의 압박과 한국의 국가 부채, 재정적자 증가의 압박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지방선거는 끝났다. ... 이제 정치 과잉의 열기에서 벗어나 다시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발끈을 고쳐 매야 할 때다. ... 구조조정, 노사관계 개선, 개혁은행 민영화 등 인기 없고 골치 아픈 현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도 어떤 식으로든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번에 이명박이 너무 싫어서 민주당을 찍은 사람들도 그 당을 지켜볼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 전가, 민주적 권리 공적, 4대강 사업 등에서 민주당이 일관되게 반대해 싸우는지를 말이다.

다함께 운영위원회
» 계속해서 3면을 읽으시오

는지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금자들의 상황을 영국 대사관 쪽에 알려 주도록 영국 정부가 이스라엘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게 아니면 대사관이 알면서도 말을 안 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사건의 전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끼워 맞추 시간을 벌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번 사건이 서로 대등한 세력 간의 충돌로 기억되길 원하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건의 진실이 절대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억압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물어뜯는 강패 국가다.

이스라엘을 왕따 국가로 전락시키고 팔레스타인 민중의 해방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우리 나라 정부가 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하고 이스라엘과 모든 관계를 끊게 만들자. 이스라엘 항의 시위에 동참하자.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번역 천경록

반MB 민주대연합의 승리인가?

다함께 운영위원회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를 “반MB 민주연합의 승리”라고 평가한다.

물론 한나라당이 참패했고, 민주당이 부활했고,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 비해 전진했다.

분당 전인 200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광역의원 15명, 기초의원 66명이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인천 남동구청장과 동구청장, 울산 북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세 명과 광역의원 23명, 기초의원 1백16명이 당선됐다(여기에 광역의원 3명과 기초의원 22명이 당선한 진보신당까지 합하면, 진보정당들은 2006년에 비해 급절 성장했다).

선거적 계산으로 본다면 민주노동당은 반MB 민주연합을 통해 분명히 실리를 챙겼다. 민주노동당이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기초단체장에 당선한 것(그것도 두 군데에서)은 민주노동당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을 밀어 준 대가였다.

우리는 이미 선거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반MB 민주연합이 민주노동당 같은 군소 진보정당이 의석을 늘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이 ‘스타’ 정치인은 없지만 기층 조직이 비교적 탄탄하므로 반MB 민주연합을 통해 민주당 후보와 맞붙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선거적 실리를 챙긴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반MB 민주연합에 더 매달릴 것 같다. 이의염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번에 나타난 민심을 잘 보고, 오는 7월과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세 차례의 재보궐 선거를 시험대로 삼아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선거연합을 잘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계급투쟁의 관점

그러나 선거적 관점에서만 바서는 안 된다. 계급투쟁과 계급 정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반MB 민주연합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첫째,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했던 수도권 선거에서 진보정당의 목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었다.

민주노동당은 수도권에서 민주당/참여당을 위해 후보를 사퇴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진보정당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색깔을 보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강기갑 대표의 표현)을 무릅쓰고 곳곳에서 민주당 당선을 위해 자당 후



한명숙 후보 선거 운동을 하는 민주노동당 지도부.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선거에서 “국민적” 승리를 앞세워 계급 정치를 실종시킬 반MB 민주연합을 추진했다.

보를 사퇴시켰다.

지난 10여 년 동안 진보 염원 대중은 투표와 투쟁을 통해 민주당의 영향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그러나 이번에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민주당을 구하려 애썼다. 진보적 강령을 내세워 진보 염원 대중의 신뢰를 획득한 뒤 이 신뢰를 대부분 민주당에 헌납한 것이다.

그 결과 서울처럼 중요한 지역(반MB 민주연합 압력이 가장 심하기도 했던)에서 민주노동당은 기초단체장뿐 아니라 광역의원 선거까지 전멸했다.(기초의원 3명이 당선했을 뿐이다.) 정당 득표도 전국 평균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반면, 진보신당 서울 구청장 후보들(영등포구, 관악구)은 완주해 각각 7.6퍼센트와 5.7퍼센트를 얻었다.

노회찬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는 반MB 민주연합의 압착이 너무 심해 평소 지지율의 절반에 그치긴 했지만 말이다.(이번 선거에서 진보신당은 두 가지

길 — 경기와 부산에서 반MB 민주연합을, 서울에서는 독자 완주를 — 채택했는데, 두 길 모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둘째,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반MB 민주연합을 호소했지만(이것은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었다), 1백52만 명(7.2퍼센트)이 광역의원 비례투표에서 민주노동당에 투표했다. 진보신당 정당 득표(3.1퍼센트, 65만 명)까지 합치면 2백17만 명이 민주당이 아닌 진보정당들에 투표했다.

이것은 상당수 대중이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민주당 지지 호소를 순순히 따르지 않음을 보여 주는 지표다.

러시아 혁명이 트로츠키는 1936년 6월 프랑스 공산당의 인민전선 정책의 모순을 이렇게 지적했다.

“공산당은 인민 앞에서 급진당의 수호자가 됐다.

“이들은 노동자와 농민에게 완전한 구원은 바로 달라디에[급진당(진자본주의

중간계급 정당) 지도자] 내각이라고 확신시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선거 운동 기간의 주제였다. 이에 대한 대중의 응답은 무엇이었는가? 공산당을 철제한 좌익으로 인정하고 이 정당에게 엄청난 표와 의석을 선사한 것이었다.”

셋째,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반MB 민주연합 전략은 머지않아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인천에서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통해 당선한 민주노동당 구청장들은 인천시장으로 당선한 송영길의 앞으로 펼쳐질 재정적자 해소 정책이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단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대선에서 민주대연합을 통해 연립정부를 구성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도부의 의도와 다른 현실이 펼쳐질 수도 있다. 사태의 주인공으로 등

장했다가 곧이어 위기를 맞는 경우는 허다하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동요하다 배신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핵심 지지 기반의 계급적 성격 때문이다. 그래서 〈한겨레〉와 〈경향신문〉도 반MB 정서가 이렇게 강한테도 민주당 지지율이 형편없다고 자주 개탄했었다.

이런 이유로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반MB 민주연합 프로젝트가 옳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일면적이다. 모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기계론적인 것이다.

넷째, 무엇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반MB 민주연합을 위해 반MB 진보연합을 희생시킨 것은 커다란 정치적 패착일 수 있다. 진보적 정치 대안의 전망을 부재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의염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은 “선거연합이 성사된 곳은 MB심판이 효율적으로 이뤄졌고,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다”고 했다. 반MB 민주연합이 언제나 선거적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암시한 셈이다.

이번 선거에서 반MB 민주연합이 전국 수준에서 선거적 성공을 거둔 것은 사실이다. 광범한 차악次惡(민주당) 선택 정서 덕분이다.

그러나 반우파 국민연합이 언제나 선거적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차악도 악이긴 마찬가지’라는 정서가 더 광범하면 그렇게 된다.

가령 2004년 미국 대선에서 미국 진보진영은 ‘부시만 아니면 누구든 좋다’(Anybody But Bush) 민주당 후보 존 케리를 지지했지만 패배했다. 존 케리와 민주당이 이라크 전쟁을 지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지난 3월 이탈리아 선거에서 재건 공산당은 민주당과 반(反)베를루스코니연합을 이뤄 대항했지만 패배했다. 민주당의 배신적 전력으로 대중이 투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6·2지방선거는 지난 3월 프랑스 지방선거와 더 유사한 면이 있다. 우파 대통령 사르코지에 맞서 ‘복수좌파’연합이 집권당을 패퇴시켰다.

요컨대, 반MB 민주연합의 선거적 성공은 예정된 결과가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서 동맹 세력(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대중 정서와 관계 있다.

우리는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선거에서 “국민적 승리”라는 포퓰리즘적 관점에서 반MB 민주연합을 추구하지 말고 계급 정치의 관점에서 반MB 진보연합을 추진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노회찬 후보는 사퇴했어야 하는가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불과 0.6퍼센트 차이로 아쉽게 낙선하자 끝까지 완주한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선거의 핵심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보기 좋게 낙선하기를 바란 사람들의 심정은 이해가 간다.

그럼에도 한명숙 후보의 낙선을 노회찬 후보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사실, 한나라당-민주당 양당 구도의 압박이 워낙 강해 노회찬 후보는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지지율이 감소해 왔다. 그래서 노회찬 후보는 원래 자기 지지율에도 훨씬 못 미치는 득표(3.3퍼센트)만 할 수 있었다.

노회찬 후보가 사퇴했어야 했다는 주장은 앞으로도 진자본주의 주류 양

당이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선거들에서는 진보정당 후보가 출전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그리 되면 한국 정치가 부르주아 양당 체제로 고착될 위험이 있다.

오세훈 낙선시키는 것도 좋지만, 진보정당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실용주의적으로 그대서는 안 된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

한명숙은 강한 반MB 정서를 대변하긴 했지만, 진보적 노동자들의 대변자가 되기에는 부족했다.

반면, TV 토론회에서 노회찬 후보가 용산참사로 희생된 철거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오세훈 후보를 질타할 때, 전시 행정에 쓸 돈을 노동자·서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라고 주장할 때, 노동자들은 속 시원함을 느꼈을 것이다.(오세훈

과 선관위의 악의적 방해 때문에 노회찬 후보가 TV 토론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한 것은 아쉽다.)

우리는 최악을 막는다는 이유로 차악을 선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차악론은 노동자들의 독자적 정치 대안 건설을 가로막거나 아니면 실용주의적으로 왜곡시켜 그 대안을 기회주의적인 경향으로 변질케 만들기 때문이다.

2002년 대선에서도 이회창의 당선을 막기 위해 권영길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는 압력이 강했다. 그러나 권영길 후보는 당시 그 압력에 굴하지 않았다. 그 덕분에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었다.

이것은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민주당이 아닌 진보적 정치 대안의 전망을 제공해 줬다.

폴라주 ㉘

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새롭게 발견된 TOD영상

방위각: 2848 고각: 048 10-06-02 21:33:18



TOD : Truth Observation Device(진실촬영장비)

이스라엘은 여전히 미국에게 꼭 필요한 경비견

이스라엘은 이번 학살 만행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했다. 예상할 만한 일이었지만, 일을 치른 뒤에도 이스라엘은 황당한 거짓말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했다. 흉악한 범행 수법도 놀랍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축에 드는 이 국가(뱅크, 공격 헬기, 전투기에 더해 핵무기까지 갖춘)는 팔레스타인 민중에 맞선 상시적 동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끓어 죽어 가고 있는 가자 민중이 감히 저항이라도 하면 이스라엘은 이를 빌미로 더 많은 살육을 자행한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누군가가 이스라엘의 봉쇄를 뚫고 가자 민중에게 구호품을 전달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시나리오였을 것이다.

이번 만행에 대해 많은 나라 지도자들이 입 발린 ‘유감’ 표명을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에게 버림받을 것이라 믿는다면 착각이다. 1967년 6월에 이스라엘이 미 해군 정찰선인 리버티 호를 오인 사격한 사

건을 떠올려 보라. 그때는 미군 34명이 죽고 1백71명이 다쳤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는 이스라엘이 예나 지금이나 미국 지배계급에게 중요한 우방이기 때문이다.

구소련이 아랍 민족주의를 후원했던 냉전 시대에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동맹이 필요했다.

조지 W 부시 재임 중에도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켜주는 동맹이었고,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강화됐다.

그러던 중 오바마가 당선하자 이스라엘 사회 일각에서는 양국 관계의 변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가 이스라엘을 사실상 두둔하고 있는 것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여전히 힘을 쏟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한 염려가 기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은 자신만만하다. 자신이 처벌받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최근 몇 달 동안 팔레스타인 영토 내로 정착촌을 확대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격 횟수를 늘리면서 그것을 확인해 보기도 했다. 가자지구 구호 선단에 대한 공격은 이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이 사건의 뿌리는 더 깊은 곳에 있다.

이스라엘의 첫째 동기는 2006년에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을 침공했다가 헤즈볼라에게 당했던 수모를 떨쳐내고 이스라엘이 여전히 미국의 이익을 수호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6월 1일, 이스라엘의 만행에 분노하는 이집트인들의 시위 이스라엘의 만행에 대한 세계적 분노가 일고 있지만 미국은 강패국가 이스라엘을 계속 후원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배력이 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거 추방하고 세워진 인종차별 국가이며 미 제국주의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현 시점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맺고 있는 관계를 설명해 주는 배경은 미국의 ‘대테러 전쟁’과 중동에 대한 지배욕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그

동안 미국의 뜻대로 풀리지 않아 온 것을 보면 미국이 이스라엘을 앞으로도 계속 후원할 가능성이 높다.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여전히 중동 지역에서 자기들보다 약한 국가들을 괴롭히고 무릎 꿇릴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구호 선단에 대한 공격은 이 같은 패권의 논리적 귀결이다.

우리 모두 이스라엘의 학살 만행에 항의하고 가자지구 봉쇄의 종식을 요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이스라엘의 군사적 폭력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항의 시위를 벌인다면, 그리고 중동의 강력한 노동계급이 제국주의에 맞서 자신들의 힘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천경록

추천 소책자

《강탈 국가, 이스라엘》



존 로즈 지음,
다함께
2천 원

구호 활동가들 살해하고 거짓말하는 이스라엘

매튜 쿡슨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를 뚫으려는 활동가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고 싶었다.

6백 명 이상이 참여한 가자지구 구호 선단은 구호 물자 1만 톤을 싣고 있었다.

‘자유 함대’(Freedom Flotilla)라고 불리는 이 구호 선단은 5월 27일 크레타 섬에서 출발, 28일에 키프로스를 경유해 가자지구로 향했다.

일요일 밤, 이스라엘 영해 가까이 온 선단을 이스라엘 군함 세 척이 공해상에서 맞이했다. 구호 활동가들은 슬슬 이스라엘의 의도를 경계하기 시

작했다.

“선단 쪽에서 들려온 소식은 이스라엘 전투기와 헬기들이 선단을 위협하면서 경고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자해방운동(Free Gaza Movement)의 공동 창립자인 매리 휴즈가 키프로스에서 전한 소식이다.

“그것이 선단에서 온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특공대가 ‘마비 마르마라’ 호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 것은 새벽 네시였다. 그들은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갑판으로 내려왔다.

승무원들과 구호 활동가들은 당연하게도 이 어처구니없는 해적질에 맞서 저항을 시도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병

사들이 발포했다.

최소 아홉 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

사건이 벌어지고 24시간 뒤에도 이스라엘 당국은 사상자 수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실탄을 사용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매리 휴즈의 말이다.

“이스라엘은 마치 자기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선단을 덤친 것은 중무장하고 복면까지 쓴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평화 활동가들을 살해하고는 오히려 활동가들에게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선단을 장악한 이스라엘 군은 가자

지구 북쪽 23마일 지점에 있는 아슈도드 항구로 선박들을 끌고 갔다. 승무원들과 활동가들은 외부와 교신이 차단된 상태로 구금돼 있었다.

“‘자유 함대’의 기획 의도는 가자지구 봉쇄를 뚫는 것이었습니다.” 매리 휴즈의 설명이다.

“[가자 지구는] 1백50만 명이 갇혀 있는 거대한 감옥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구호 선박이 가자로 향할 것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많은 할머니들이 가자 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배에 오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할머니들이 탄 배도 공격할까요? 할머니들을 죽이면 더 마음이 놓일까요?”

번역 천경록

봉쇄된 가자 지구의 삶

이스라엘은 2006년 이슬람주의 저항 운동인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당국 선거에서 승리한 뒤부터 가자 지구를 봉쇄해 왔다.

이스라엘은 2008년 12월~2009년 1월 사이 가자 지구를 맹렬히 공격해 사회기반시설을 파괴하고 1천3백 명을 죽였다.

가자 지구의 의사인 모나 엘팔라는 〈소셜리스트 워커〉에 이렇게 말했다. “가자는 큰 감옥입니다. 적은 양의 구호품만 가자 지구로 반입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파괴한 집을 다시 짓는 데 필요한 시멘트는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자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보여 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집트와 가자의 라파를 연결한 지하 터널을 통해 가스통을 몰래 들여오다 폭발해 6명이 사망했다. 봉쇄가 시작된 뒤부터 1백46명이 터널 사고로 죽었다.

엘팔라는 이렇게 말했다. “구호선단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들었을 때 가자 지구 주민들이 항구에 모여들어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제 활동가들을 검취 팔레스타인 지원 활동을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구호품을 전달해 주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영웅적 행동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란 점을 보여 줬습니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천경록

학살자 시몬 페레스가 한국에 온다

이스라엘 대통령

이스라엘 대통령 시몬 페레스가 6월 8일 한국에 온다.

페레스는 강패국가의 대통령답게 이번 구호 선박 학살이 “한국에 대한 북한의 도발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호전적인 주변 국가의 도발에 대해선 엄중히 대응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래서 이명박은 페레스를 좋아한다. 이명박은 올해 초 다보스포럼에서도 페

레스와 회담을 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스라엘의 구호 활동가들 학살 직후, “깊은 유감”과 “심심한 애도”를 표하는 애매한 외교부 논평을 낸 뒤, 이스라엘 정부를 규탄하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투표에서 기권했다.

유엔인권이사국인 한국 정부는 지난해에도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폭격을 규탄하고 중지를 촉구하는 유엔인권이

사회 결의안에 기권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이스라엘과 군사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또 이스라엘의 대(對) 팔레스타인 정책을 지지한다.

한편, 한국 정부와 기업주들은 페레스의 방한을 무기 수출을 늘리는 기회로 삼으려 한다.

〈예루살렘 포스트〉(5월 28일치)에 따르면, 페레스와 동행하는 이스라엘 기업인들은 주로 엘빗시스템스, 이스라엘

에어크래프트, 엘타 등 이스라엘의 주요 군수업체 관계자들이다.

페레스는 한국의 훈련용 초음속 제트기인 “T-50”에 관심 있다고 밝혔다. 기사를 쓰는 지금, T-50에 부품을 납품하는 방산기업 퍼스텍의 주가가 급상승세를 탄다는 주식 보도가 나왔다.

우리는 남한과 이스라엘의 전쟁광들의 만남을 절대 환영할 수 없다.

김문성

천안함 사건을 이용하는 제국주의 열강들

어떤 경우에는 사건의 진실보다 그것의 효용성이 더 중요하다. 천안함 사건이 딱 그런 경우다.

전모도 불확실한 이 사건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관된 동북아 최대 이슈가 된 것은 동북아 국가 간 관계가 참으로 공교로운 때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미 전략 대화를 코앞에 두고 미국은 위안화 절상·정부 조달·이란 경제 제재 수위를 높고, 중국은 타이완 무기 판매·남중국해 미군함 순시를 놓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미군 기지 이전 문제에서 오바마 정부의 오만함과 오키나와 도민들의 정당한 반발에 부딪쳐 진퇴양난 상황에 빠져 있었다.

또, 일본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일본 해군의 배타적 영역이었던 오키나와 근해에서 중국 해군이 조금씩 활동량을 늘리는 것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중이었다.

미국과 일본은 천안함 사건을 난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회로 활용했다.

오바마는 이 지역에서 미국이 여전히 최강의 무력 집단이자 가장 많은 동맹을 거느리고 있음을 증명하는 기회로 활용해 중국에 압력을 넣었다.

견제

하토야마는 오키나와 주민의 이익과 미일 군사 동맹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후자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천안함 사건을 활용했다. 하지만 미일 군사동맹을 선택한 진정한 이유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데 미국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감출 수는 없었다.

하토야마가 후텐마 고수 결정을 발표하기 직전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일본의 중국 군함 감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아를 약간 넓혀 동남아를 포함시키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카드로 역외 열강을 활용하려는 나라들은 인근에 더 많이 있다. 미국은 이 점을 패권 유지에 이용하고 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미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다음과 같이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옛 동맹(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새로운 친구들(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게도 자신이 이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것임을 확신시키려 한다.”

결국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반응은 사건 자체보다는 지난 몇 년 간의 좀더 근본적 변화 —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몰두하느라 동아시아에서 ‘힘의 공백’이 생겨난 듯이 보인 것과 중



5월 30일 한중일 정상회담 동상이몽의 극치

국의 부상 — 에 대응한 것이라는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당장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냉전 구도가 부활하는 것으로 치단지는 않을 것이다.

첫째, 미국·중국 그리고 동북아와 동남아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서로 복잡하

게 얽혀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게 중국으로의 수출은 경제 위기의 심화를 막는 버팀목 중 하나다.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다.

둘째, 미국은 아직 중동과 서아시아에서 끝내야 할 전쟁이 있다. 그래서 미국

은 이번 사건이 실제 군사적 충돌로 비화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한국 정부 관리가 미국 정부와 논의한 뒤 “안보리 조치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상징적, 도덕적 메시지가 될 것”이라 말한 것은 그 때문이다.

셋째,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 동맹

정부가 의혹 투성이 “증거”로 북한 압박한다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미국 정부는 중동에 발이 묶여서 한반도로 전선을 확대할 능력이 없고, 이명박 정부도 전쟁이라는 무모한 도박을 할 처지가 아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대북제재와 압박은 강화하려 한다. 중국의 비협조와 역풍 조짐 등 때문에 약간의 속도 조절 움직임은 있지만 기본 방향은 바뀌지 않고 있다.

유엔안보리 회부, 대북 심리전 재개,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서해상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연내·외 해상 차단 훈련, 대북 지원 중단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명박은 이것이 “북한이 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안함 사고가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 하기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많다.

미국과 남한 정부는 북한에게 ‘바른 길’을 가라고 할 자격도 없다. 미국은 1만기가 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과 학살을 저질렀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미국을 돕고 국내에서도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북한은 제재와 압박 강화에 강력 반발하면서 남북관계 전면 단절, 남한 선박과 항공기의 운항 차단, 개성공단 육로 차단 위협, 대북심리전 확성기 격파 사격 경고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발적 충돌이나 교전이 벌어질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에 따라 북한 선박 검색이 추진되면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미 북한은 이것을 “선전포고”로 규정한 바 있다.

비수

제재와 압박은 북한이 핵 실험 등에 나서도록 등 떠미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은 “국제 여론도 유엔 현장도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막지 못했다”며 핵 개발을 했다. 그런데 부시 정부는 북한을 핵 선제공

격 대상으로 올려놓고 제재와 압박을 강화했고, 결국 북한은 2006년 1차 핵 실험에 나섰다. 오바마 정부 들어서도 키 리졸브 군사훈련과 대북제재가 이어지자 북한은 ‘오바마가 부시와 다를 바 없다’며 2009년 2차 핵 실험에 나섰다.

그런데 이제 천안함을 빌미로 미국과 남한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사태를 낳을지 불안하기만 하다.

더구나 중국이 앞마당으로 여기는 서해에서 한미 해군이 어뢰 발사, 폭뢰 투하 등 대잠수함 훈련을 할 경우 중국은 이를 ‘열구리에 비수를 들이대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것은 이 지역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며 군비증강을 가속화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북 제재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북한 민중이다. 독재자 후세인을 벌준다는 UN의 13년간 경제제재도 평범한 이라크 민중의 삶만 파괴했다.

대 중국 동맹의 구도가 고착되면 자신이 불리함을 잘 알고 있다. 천안함 사건에서도 ‘애매한 태도’를 취한 것은 실질적 대북 압박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중국 대 한미일 연합’의 구도도 흐려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한때 불장난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동아시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까? 일단 북한책임론을 둘러싸고 중국과 한미 사이에 갈등은 여전하다. 중국은 곧 실시될 한미 간 대규모 군사 훈련이 자신도 노린 것을 알기에 심기가 불편할 것이다.

열강들이 동아시아 긴장 구도로 불장난을 하는 것이 언젠가 남북 간 우발적·국지적 충돌을 낳을 수도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잠재적 갈등이 쌓인 상태에서 앞서 말한 제약 요인이 약해지거나 사라졌을 때 지역 열강들 관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다.

과거 1930년대 대공황이 보여 줬듯이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열강 간 관계가 순식간에 변할 수 있다. 1920년대 독일과 일본은 미국 시장과 금융에 크게 의존해 성장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십수 년 뒤에는 미국과 역사상 최대의 전쟁을 치렀다.

그래서 나는 ‘지금’은 괜찮다’는 주류 언론들의 논평에도 마음이 안 놓인다.

김용욱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사회포럼과 마르크스주의 포럼에 초대합니다!

다함께 사회포럼

서울 동부 사회포럼
마르크스주의와 생태 — 자본주의, 사회주의, 지구의 미래
연사: 정호중 (<레프트21> 기자, 코차 발바 세계기후민중회의 참가)
일시: 6월 9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여성능력개발원 3층 1강의실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학생 1천5백 원)
문의: 02-447-0397, 010-9372-2746

서울 중북부 사회포럼
경제위기 시대, 복지 국가의 정치경제학
연사: 장호중 (<레프트21> 기자)
일시: 6월 10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7호(혜화역 4번 출구 3분 거리, CGV 옆 건물)
참가비: 2천 원
문의: 070-8113-8541, 010-8481-2626

서울 서부 사회포럼
천안함 사고, 안보정국 — 한반도 위기의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연사: 전지윤 (<레프트21> 기자)
일시: 6월 10일 (목) 오후 8시
장소: 가톨릭 청년회관 CYC 4층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학생 2천 원)
문의: 02-324-3400, 010-7214-1157

서울 남부 사회포럼
인민전선의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연사: 최영준 (다함께 운영위원)
일시: 6월 10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강남스타디 605호 (강남역 6번 출구 외환은행 건물 6층)
참가비: 4천 원
문의: 010-2401-1987

세상을 거꾸로 보는 청소년 토론교실 “물구나무”

연사: 송재혁 샘 (현 중학교 교사)
일시: 6월 12일 (토) 오후 2시
장소: 대학로 (웹사이트 추후 공지)
참가비: 2천 원 (간식과 토론 준비 비용)
문의: 010-8827-0319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지향하는

계간 **마르크스21**

5호(2010년 봄)

www.marx21.or.kr

정기구독 문의
02-2268-7608

특집

한국 경제 불안정한 회복의 이면 _ 강동훈

이명박 집권 3년차 - 평가와 전망 _ 전지윤

금융화 테제와 장하준의 민주적 복지국가 모델 비판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혁주의적 대안의 문제들 _ 정성진

유럽중심주의와 민족주의 비판

마르크스주의와 동아시아 역사 _ 오연 밀러

현대 정보사상 조류

<더 레프트 1848~2000> 비평 _ 폴린 버커

쟁점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중등교육 정책 _ 정진희

코펜하겐 이후 기후정의 운동의 전망과 과제 _ 장호중

아프가니스탄 재파병과 지방재건팀의 정치경제학 _ 김어진

크리스 하먼을 기리며

한 투사의 생애 _ 이연 버철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

“오바마의 카트리나”

멕시코만에서 일어난 BP(영국 석유회사)의 원유시추 사고로 얼마나 많은 원유가 바다로 흘러나오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하다. 그러나 이 사고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환경 재앙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사고로 기록될 것이라고 얘기한다.

처음 사고가 났을 때 BP와 미국 정부는 원유가 하루에 “겨우” 1천 배럴씩 바다로 흘러나오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추정치는 금방 5천 배럴로 늘어났고 지금은 매일 1만 7천 배럴씩 유출되고 있다고 얘기한다. 일부 과학자들은 6만~7만 배럴에 이를 것이라고도 한다.

인근 지역 수산업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이번 원유 유출이 물고기와 새들, 바다 포유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파악하는 데만도 엄청난 세월이 걸릴 것이다.

엄청난 양의 기름이 단순히 물을 오염시켰을 뿐 아니라 물속에 있는 산소를 고갈시켜 모든 수중 생명체가 멸종 위기에 놓였다.

원유 유출을 막으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했고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기름을 분해하겠다고 뿌린 화학약품 때문에 기름 덩어리가 작은 입자들로 쪼개졌고 화학약품과 결합해 무거워진 입자들이 수면 아래에서 떠다니고 있다. 달라진 것은 이제 그 기름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원유 유출량 추정치가 달라진 이유는 돈 때문이다. 미국 수질오염방지법에 따르면 BP는 유출된 원유 1배럴당 벌금



막대한 석유 유출 때문에 검게 물든 멕시코 만

는 것이다.

사고가 벌어진 원인도 돈 때문이다. 원유 유출의 원인이 된 4월 20일의 폭발 사고는 석유굴착장비를 다른 시추 지점으로 옮기려고 서둘러 유정을 봉쇄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그 덮개는 헬리버튼(미국 에너지·군수 업체)이 만든 싸구려 제품이었다. BP가 임대해서 사용하던 시추장비는 하루 임대료만 1백50만 달러다.

원유 채굴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고 자랑해 온 BP는 안전 문제에서는 악명을 떨쳐 왔다. 2005년 텍사스 BP 정유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15명이 죽었

다. 그런데 이 사고 뒤에도 BP는 안전 문제를 시정하지 않아 지난해 10월에 8천 7백만 달러 벌금형을 받았다. BP는 시추 장비의 안전 밸브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문제를 교정하지 않았다.

다른 석유 기업들처럼 BP도 바다 밑을 시추할 때마다 시행하도록 돼 있는 환경영향평가 의무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한다.

2009년에 BP가 멕시코만 해저 시추권을 유지하려고 미국 정부에 로비 자금으로 지불한 돈만 해도 1천1백만 파운드나 된다.

그리고 BP와 그 하청업체들은 미국 정부의 후원 덕분에 이번 시추를 할 수 있었다.

오바마는 부시의 환경 정책을 비판하며 대체에너지 개발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검은 황금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검은 황금’을 차지하려는 경쟁은 늘 폭력과 부패를 낳았다.

한 줌의 거대 기업들과 산유국이 산업 전체를 통제하고 있고 주요 패권 국가들이 그들을 후원한다. 이들은 이윤과 패권을 위해 전쟁과 쿠데타도 불사한다.

석유를 시추하고 운반, 정제, 연소하는 모든 과정에서 환경이 파괴된다. 지역적으로는 공기와 물을 오염시키고 세계적 수준에서는 기후변화를 낳았다.

최근의 재앙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사고와 오염의 극단적 사례일 뿐이다. 1월에도 텍사스 포트 아서에서 유조선이 바지선과 충돌해 원유 45만 갤런이 유출됐다. 에콰도르에서는 텍사코(석유회사)가 사고를 내 원유 1천7백만 갤런과 독성 폐수 1백90억 갤런이 숲으로 흘러들어 갔다.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로 기록된 1979년 멕시코 익스톡 원유 유출 사고는 아직도 그 여파를 미치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천연 가스가 시추 구멍으로 흘러들어가 폭발 사고가 났고, 그때나 지금이나 폭발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다.

당시 2백97일 동안 원유가 흘러나왔다. 유출을 “막았다”고 한 다음에도 원유 유출은 석 달 이상 계속됐다. 익스톡 유정은 수심 1백50피트였다. 이번 사고는 수심 5천 피트에서 일어났다.

일부 신문들은 이 사고를 ‘오바마의 카트리나’라고 부르고 있다.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는 BP한테서 오염 제거 비용을 마지막 한 푼까지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이 멕시코만에서 석유 시추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이를 번복하도록 하는 데 개입한 것이 바로 미국 정부다.

원유 유출을 막으려는 마지막 시도가 실패했고 백악관 에너지 보좌관 캐롤 브라우너는 8월까지의 원유 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발표했다. 최소한 2천만 갤런이 멕시코만으로 흘러나왔고 11명이 죽었다.

장호중

한국군 아프가니스탄 파병 임박

파병은 재건이 아니라 점령일 뿐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고를 이용해 북풍 물이에 열을 올리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될 아세나 부대는 출전 준비를 마쳤다. ‘지옥으로 가는 문’ 앞에 선 것이다.

6월 15일 선발대원로 떠나는 특전사 부대원 80명을 시작으로 7월 초까지 군인 3백20여 명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나게 된다. 한국은 국제안보지원군(ISAF)에 참여하는 마흔여섯째 국가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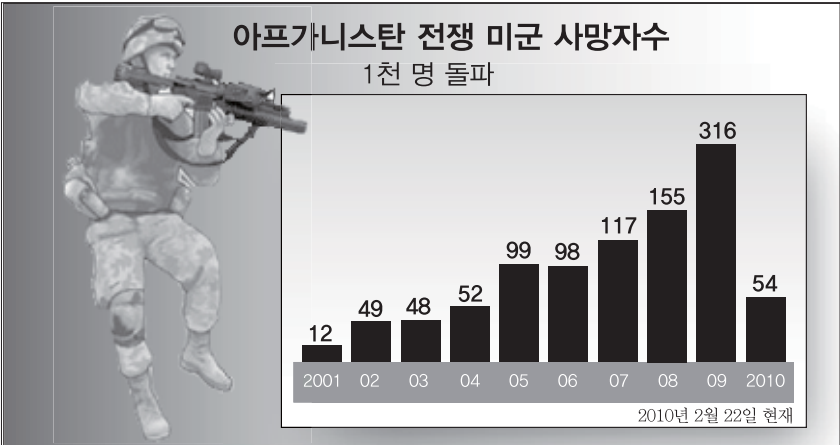
이명박 정부는 “국제 평화”, “재건”이라는 말을 들먹이지만 아세나 부대는 결코 아프가니스탄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아세나 부대는 강력해진 탈레반과 자신들을 증오하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과 대면하게 될 것이다.

‘점령군 소탕 작전’

지난 5월 20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사망자 수가 1천 명에 이르렀다. 이미 두 차례나 아프가니스탄 미군 증파를 강행한 오바마 정부는 집권 17개월 만에 무려 미군 4백36명의 목숨을 전쟁 제단에 바쳤다. 앞선 8년 동안 목숨을 잃은 미군 5백 명에 가까운 수다. 게다가 지난 몇 년 사이 미군 사망자 수는 해마다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그런데도 오바마는 라마단이 시작되는 8월 전에 아프가니스탄을 ‘안정화’하겠다고 버르고 있다. 특히, 탈레반의 주요 근거지인 남부 칸다하르에서 곧 대규모 소탕 작전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소탕 작전은 성공할 수 없다.

점령군은 지난 2월 남부 헬만드 주 마



르자를 시작으로 탈레반 소탕작전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미군의 마르자 장악은 오래가지 않았고, 이제는 탈레반이 귀환해서 ‘점령군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다.

나아가 탈레반은 5월 10일부터 점령군과 부역자들을 대상으로 한 ‘알 파트’(승리) 작전을 시작했다. 미군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의 핵심 근거지인 카불에서 나토군이 공격을 받아 하루 만에 50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

심지어 탈레반은 파르완 주 바그람 미군기지에 로켓포를 발사하고 자살폭탄 공격을 감행하며 기지 진입을 시도했다. 무려 8시간 동안 국제안보지원군(ISAF)과 격렬한 교전을 벌였다. 탈레반은 이 과정에서 바그람 미군 기지 안까지 진격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바로 이곳에 한국이 운영하는 병원과 지역재건팀(PRT) 임시 사무소가 있다. 그리고 바그람 미군 기지에서 겨우 15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 아세나 부대가 머

물 것이다. 화약을 짚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격이다.

진정한 ‘평화’와 민주적인 ‘재건’을 위한 길은 지금 당장 모든 점령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것밖에 없다. 오바마가 제아무리 화려한 수사로 아프가니스탄의 “재건”과 “안전”을 역설해도 점령군이 민간인을 학살하는 현실을 감출 수는 없다.

지금 미군과 나토군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군과 경찰도 믿지 못해 총격을 주고받는 처지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은 파병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아세나 부대 파병을 강행하고 있으나 머지않아 더 강력한 철군 여론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라크에서 자이툰 부대가 철수할 때까지 끈질기게 저항했던 반전평화세력들은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반대하고 철군을 요구하는 끈질긴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김덕엽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기획팀장

폭스콘 노동자 연쇄 자살

중국 자본주의의 처참한 현실

아이패드와 아이폰 열풍 한가운데서 중국 노동자들의 절규가 울려 퍼지고 있다.

중국 선전의 폭스콘 공장에서 노동자 12명이 잇달아 투신해 그중 11명이 사망했다.

폭스콘은 대만 홍하이 그룹의 자회사로 애플이나 HP, 델의 제품을 위탁 생산한다. 연쇄 투신자살이 발생한 선전에는 노동자 40여만 명이 고용돼 있고, 주로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생산한다.

18세에서 25세에 이르는 젊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공장 안의 엄청난 노동강도와 군대식 통제다.

폭스콘 대변인 류쿤은 열결에 사전에 제지된 노동자 자살만 20~30건이라고 밝혔다.

홍하이 그룹 회장 귀타이밍은 투신자살은 개인 감정 때문이며 “우리 공장은 절대 초차취 공장이 아니다” 하고 말했지만 공장 안의 실상은 그 말을 무색케 한다.

대화 금지

폭스콘의 장시간 근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노동자들은 매일 수천 번의 단순 동작을 12시간가량 쉬 없이 반복해야 한다.

중국 〈남방주말〉이 잠입 취재한 기사를 보면 노동자들이 차라리 산재를 당해 병원에서 쉬고 싶다고 말할 정도

다.

작업중 동료들 간의 대화는 금지돼 있으며 화장실도 5분 이상 다녀올 수 없다.

심지어 식당에서 밥을 남겨도 벌점을 매기며 세 번 적발 시 해고된다.

한 여성 노동자는 공장 안의 생활을 단 두 단어, “긴장과 억압”으로 묘사했다.

귀타이밍은 아홉 번째 투신자살이 발생한 이후에 유명한 승려를 불러 회사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식을 한 것 말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열한 번째 투신자가 발생하자 기숙사 옥상에 3미터 높이의 철망과 아래쪽에 추락 방지를 위한 이른바 ‘사랑의 그물’을 설치하고 심리 상담사를 배치하는 것 외에 근본적 해결책은 내놓지 않았다.

심지어 노동자들이 고액의 배상금을 노리고 투신한다며, 노동자들에게 앞으로 자살이나 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배상하지 않는다는 협의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가 엄청난 반발로 바로 폐기해야만 했다.

애플과 같은 초국적 기업과 폭스콘 같은 주문생산업체, 그리고 농민공들을 밀거름으로 수출 주도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중국 정부 모두 젊은 노동자들을 죽게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타이완에서 한은솔

천안함 사건을 패권 강화에 활용하려는 미국

미 존스홉킨스대 서재정 교수는 “[천안함 사태 이후] 미국이 독자적 대북 제재를 모색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조치를 지지하는 건 미국의 지정학적 목표 달성에 유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경제 위기와 ‘테러와의 전쟁’ 실패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했고, 그 틈에 중국이 부상하면서 이른바 ‘G2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위가 예전 같지 않은 듯하다.

그래서 미국은 이번 천안함 사태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 번 동아시아의 동맹국들, 특히 중국에게 보여 주고 싶은 것 같다.

미국은 천안함 사태를 이용해 후텐마기지 이전 문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타결했다.

미중 전략 경제 대화에서 클린턴은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동의를 요구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미국은 조만간 한국과 서해에서 대규모 대잠 훈련을 하기로 합의했는데, 서해는 중국의 사실상 ‘내해’이기도 하다. 이런 미국의 행보에 중국은 상당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 미국은 한국에게 잠수함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군사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는 중국 등 인접국을 긴장하게 하고 군비확충에 더 열을 올리게 만들 것이다.

미국은 남한의 이명박 정부에게도 몇 가지 양보를 얻으려 할 수 있다.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재협상을 시사하며 주한미군 분담금 등에서 몇 가지 이득을 취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남한 정부에게 아프가니스탄 파병 규모와 수준을 계획보다 올려 달라고 요구할지도 모른다. 이미 미 국무장관 클린턴이 천안함 협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알려졌다.

천안함 침몰과 그 영향은 동아시아가 열강들의 경제적·지정학적 경쟁으로 매우 불안한 지역임을 새삼 상기시켜 줬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이명박과 오바마의 북풍몰이는 당장 좌초돼야 한다.

김영익

〈레프트21〉판매자가 연행된 곳에서 열린 거리 전시회

〈레프트21〉독자들이 신문을 판매하다 연행됐던 강남역 그 자리에서 지난 5월 28일 작은 거리 전시회가 열렸다. 2008년 광우병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이명박을 조롱하는 전시회를 청와대 앞에서 열었던 작가 연미의 전시회였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침해당한 그 장소에서 예술표현의 자유 권리를 행사하러 갈 것”이라는 작가의 의도처럼 이번 전시회는 민주주의 탄압에 항의하는 의미가 있었다.

신문을 이용한 작품들은 지배자들을 우스꽝스런 모습으로 만들어 조롱한다.

특별히 이번 전시에는 탄압받은 〈레프트21〉을 소재로 한 작품도 전시됐다. 〈레프트21〉을 이용한 작품을 보던 한 시민은 “이런 신문을 판다고 잡아가다니 어이없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김지태

작가 연미의 웹사이트 www.mindsiz.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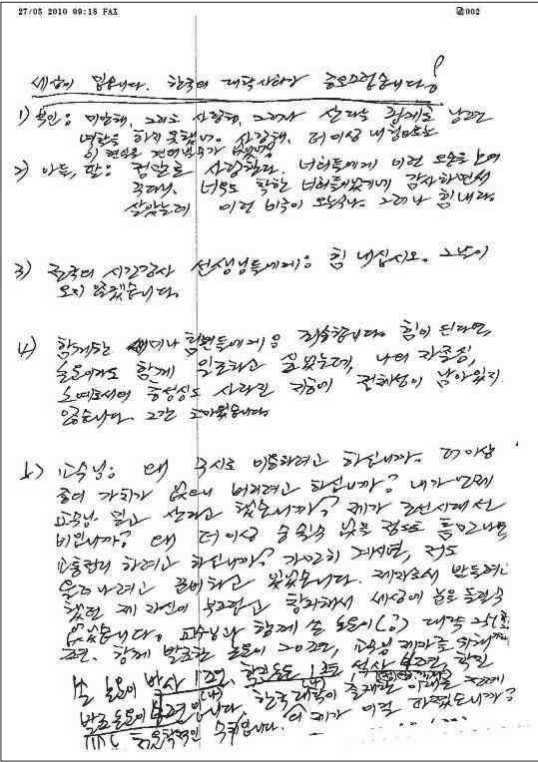
어느 시간강사의 죽음을 보며

지난 5월 25일 광주 조선대 영문학 강사 서정민 씨(45세)가 자택에서 연탄불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유서에서 자신이 쓴 논문 54편이 때로는 특정 교수의 이름만으로, 때로는 자신과 그 교수의 공저로, 때로는 그 교수의 제자들 석박사 학위논문으로 나갔다고 밝혔다.

교수 한 자리를 얻으려면 6천만 원, 1억 원씩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는 그는, 10년째 조선대에서 시간강사로 일했다. 그가 시간당 3만 3천 원을 받으며 1주일에 10시간 강의를 해서 버는 돈으로는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기에 버거워 아내가 식당일을 해야 했다.

나 같은 대학 시간강사들은 방학 때마다 실업자가 된다. 아이들 둔 강사들은 방학 기간에 아이 학원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 수 입만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는커녕 혼자 먹고살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 쥐꼬리만한 수입조차도 불안정하다. 학과 사무실 조교가 다음 학기 강의 요일과 시간을 문의하려는 전화를 해 오면, 그때서야 ‘아, 다행히 다음 학기에도 강의를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시간 강사의 현실



자살한 서정민 씨의 유서 “한국의 대학사회가 증오스럽습니다.”

이다. 전화가 안 오면? ‘아, 짤렸구나’ 하고 생각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2010년도 대학별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단가를 보면, 4년제 일반대학 1백86곳의 평균 강의료는 3만 6천4백 원이다. 시

급치고는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 강사들은 대체로 1주일에 두세 시간에서 많이 해야 10시간 정도 강의료를 하니,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이 허다하다.

1977년 박정희 정부는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박탈했다. 지식인들을 길들이려는 목적이었다. 사학재단들도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인정을 반대하고 있다. 전임 교원 임금의 10분의 1 정도면 쓸 수 있는 시간강사들에게 투자하기에는 돈이 아깝다는 게 이유다.

현재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전임 교원만 계산했을 때는 35명, 시간 강사를 포함하면 18명이다. 초중고교보다 나은 수준이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OECD 국가의 대학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5명이다.

정부와 대학은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고 전임 교원을 늘려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1백 명짜리 교양 수업에서 어떻게 수업의 질을 말할 수 있겠는가.

백은진

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연행 내 선배 주성이 형을 석방하라

5월 29일 새벽 3시 서울 광운대학교 앞에서 잠복해 있던 광주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내 전남대학교 선배 주성이 형을 강제연행했다. 신성한 학내 교정에서 현웅이 형을 폭력연행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다.

주성이 형은 2009년에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3기 광주전남대학생연합 의장으로 대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한대련 국토대장정 총대장 활동을 하고 5·18 역사기행을 주도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니, 5·18을 폭동이나 ‘북괴의 소행’으로 보는 천박한 역사의식이 아니고서야 나올 수 없는 혐의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을 꺼내 들어 학생운동의 성장을 막으려는 알팍한 수일 뿐만 아니라, 학생운동을 죽이려는 책략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서 시대를 역행하는 그들의 행태에 많은 대학생들이 반감을 갖게 됐다. 이런 학생운동의 흐름은 이명박 정권에게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도 전남대의 많은 학생회장들에게 소환장이 날아오고 있다. 이 사회의 미래와 진보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권의 대학생 탄압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김태현

교내 대자보도 수사 대상

지방선거 하루 전인 6월 1일, 나는 명지대학교 당국으로부터 다급한 전화 통을 받았다. “네가 붙인 대자보 때문에 학생복지팀이 곤란하게 됐다”는 것이 다.

사이버수사대가 학교에 와서 학교에 붙은 대자보들을 문제 삼고 자보를 쓴 나를 조사해 갔다고 했다.

대자보에는 천안함 사건을 이용해 보수세력 결집과 안보 위기 조성에 열을 올리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었다.

학생복지팀장은 내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앞으로 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명박 정부가 노린 게 바로 이것이다. 안보 위기를 과장해 불만과 저항을 억누르고 비판의 목소리를 탄압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이명박 정권의 초조함의 반증이기도 하다.

박용석



사진 Left21

빼앗은 무기들을 고스란히 반납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타이인이라면 무조건 왕을 섬겨야 한다는 ‘타이 민족주의’를 이용해 정부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을 ‘국왕모독죄’로 마녀사냥 하는 타이 지배자들의 행태는 마치 한국의 국가보안법 탄압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란 셔츠의 배후인 아피싯 정부는 대

부분이 빈민인 붉은 셔츠를 폭도로 몰고 가자 없이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그들은 붉은 셔츠와 노란 셔츠의 진정한 차이를 흐리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진실은 명백해진다. 붉은 셔츠는 단지 탁신 지지자들이 아니라, 타이 지도자를 타이 국민들의 손으로 뽑을 권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다.

육오영화

과학고 재학생이 말한다 과학고는 창의성을 증진시키는가

준비를 해야 한다.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 아니라 ‘대수론+기하+정수론+조합론’을 수학 올림피아드 전문학원에서 공부해야 입상할 수 있다. 과학 올림피아드도 마찬가지다.

물론 올림피아드 학원에 다니려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안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닐 수 없다. 그래서 돈 없으면 과학고 못 간다.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과학고에 들어오면, 더욱 웃기는 레이스가 시작된다.

과학고는 기본적으로 2년 동안(거의 다 조기졸업을 한다) 고등학교 과정과 대학교

과정 일부를 배우고 졸업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이미 입학 전에 과학고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다 배우고 들어온 학생들은 학교 수업에 별 흥미가 없다. 교사들 역시 일반고 3년 과정을 2년 만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창의력을 키우는 수업은 커녕 진도 나가는 데 급급할 뿐이다.

상대평가인 학교 시험을 잘 보려면 학교 수업보다는 과학고 내신 전문학원에서 나눠주는 문제를 푸는 게 더 유리하다. 결국 모든 과학고생은 어떤 식으로든 과학고 내신 학원에 다니게 돼 있다.

영재고는 아예 고등학교 과정을 1학년

나는 과학고등학교에 다닌다. 내가 다니는 학교는 서울대 입시에서 전국 1등을 차지하는 등 자칭 ‘세계 일류 고등학교’다.

그런데 과연 현재 과학고등학교가 ‘실력과 인성을 가진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가.

과학고 입학시험에 합격하려면 입학 전에 고등학교 수학1과정을 한 차례 이상 끝내야 하며, 입학 전까지 고등학교 과학 전 과정을 모두 끝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 한 과목을 ‘전공’으로 골라서 올림피아드(경시대회)

때 끝내고 2, 3학년 때는 대학교 과정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선행 학습을 하지 않으면 수업을 따라가기가 벅하다. 결국 영재고에 입학해도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선행 학습과 올림피아드 준비가 필수며, 빠른 진도에 혁명대다 보면 창의력 증진은 뒷전이고 문제풀이 기계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기형적인 과학고/영재고 체제는 창의력을 증진시키지 못하며, 과학고는 있는 집 지식들만 다닐 수 있는 국립 입시 학원에 불과하다.

김승기(가명)

유로존의 분열과 위기

유로화 통용 지역 정부들은 통화 위기가 폭발하는 것을 막으려고 필수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관계가 상충해 분열해 있고 노동자들의 반격을 두려워 한다. 브뤼셀유럽연합 본부가 위치한 한 관리는 "사르코지가 안정사정없이 소리를 지르며 논쟁을 벌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럽 외교관은 "사르코지는 열 발은 뜻이 보였다고 말했다. 유럽 지배계급은 다른 곳의 지배계급처럼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아마도 유럽의 곤경이 더 심각할텐데 세계경제 위기의 중대한 국면이 지금 유로화 통용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는 만약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유로화 안전망으로 7천5백억 유로를 준비한다는 계획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 유로화 통용 지역을 탈퇴하겠다고 협박했다.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장 클로드 트리셰는 유럽 경제가 "제2차세계대전, 어쩌면 제1차세계대전 이래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5월 14일 유로화 통용 지역 16개국 정상 회담은 그리스 경제 구제 패키지를 공식 승인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상황은 통제를 벗어났다. 그 전 주에 결정된 그리스 구제금융은 충분히 크지 않았고 금융 시장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공격했다. 애초에 그리스만의 위기였던 것이 이제는 유로화의 위기로 악화하고 있다. 유로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일부 전문가는 유로화가 몰락하기 일보직전이라고 주장했다.

주말에 태도를 1백80도 바꿔 ECB는 공공 재정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유로화 통용 지역 정부들의 국제적 매입하는 방식을 엄청난 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고 무려 7천 5백억 유로를 들어 유로화의 가치를 방어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적으로 ECB는 분열을 수습하고 그리스, 스페인과 포르투갈 경제의 몰락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유럽 지배계급은 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축각

온갖 허세와 엄포에도 유로화에서 탈퇴하겠다는 주장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실현될 것 같지 않다. 프랑스는 유로화에서 탈퇴할 수 있지만 그 대신 유럽연합 프로젝트는 완전히 주저앉을 것이다.

독일은 약체 정부들을 구제해야 하나고 불평을 늘어놓지만, 유로화 통용 지역 경제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 유럽위원회 의장 바로소는 균형잡힌 조세와 지출 정책이 없는 한 유로화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스페인 건설 회사가 코스타스 지역에 건설한 아파트 건설 자금은 독일 은행에서 나왔다. 그리스, 스페인과 아일랜드 부동산 불 위에는 독일 자금이 있었다. 독일 자금이 없었다면 부동산 불도 없었을 것이다. 유로화

통용 지역의 몰락은 독일 은행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축각을 곤두세운 것은 유로화 통용 지역의 지도자들만이 아니었다. 한 외교관은 버락 오바마가 사르코지와 메르켈에 전화 를 걸어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 "시장의 환심을 사야"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실지여 중국 총리 원자바오도 거들었다. 그는 만약 유럽 지도자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부채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될 거라 경고했다.

유럽연합 나라들이 개별 국가의 통화로 돌아가고 보호주의 정책을 취하면 불황이 심화되고 미국과 중국 상품의 수요도 줄어든 것이다.

트리셰는 이렇게 말했다. "유로존 통치 방식에서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무책임한 행동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배계급의 처방은 꾸짖는 것 이상이다. 그들은 공공재정의 대폭 삭감, 노동자들의 불안정을 심화하고 실업률을 높일 노동 시장 개혁과 민영화 등도 주장한다.

유럽 모든 나라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계급이 위기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임금 동결이나 삭감, 연금 수령 연령 인상들을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소개한다. 자본 투자가 필요한 계획은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된다.

스페인 경제 규모는 2009년 3.9퍼센트나 줄었다. 실업률이 20퍼센트에 이르고 청년 실업률은 그것의 갑절이다. 가족 중 아무도 일 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가구가수가 1백30만이나 된다. 이제 공공부문 임금이 평균 5퍼센트나 삭감될 것이다.

유럽 기업인 연합인 '비즈니스 유럽'은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노동자와 자본의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서비스, 에너지와 디지털 경제에서 단일 시장권이 더 확대되길 바란다.

경쟁력 없는 산업을 보호하려는 독일과 프랑스 지배자들은 이런 주장에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유로화 위기는 유럽 지배자들이 유로화와 유럽연합 프로젝트를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유로화와 유럽 연합은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축 중 하나다.

그러나 누가 그 대가를 치를 것인지를 둘러싸고 각국 정부들의 생각은 다르다. 독일은 일부 금융자산의 거래를 금지했고 약체 나라들에게 더 강력한 공공부문 긴축 정책을 도입하라고 요구한다. 사르코지는 나라 간 경제 협력을 늘려 경제적 균형을 부과하자고 주장한다.

제2단계에는 부가가치세 인상이 포함돼 있다. 사람들은 이미 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잔인한 조치들이다. 정부는 또한 금융시스템에서 마지막으 로 남은 공공소유 부문을 민영화하려 한다. 지금까지는 오직 국영은행만이 에너지, 우체국과 보험회사를 소유할 수 있었다.

스페인 사회당 정부가 긴축계획 발표하다

마이크 애우데 엔루테(투쟁 속에서 활동가

경제 위기가 발생한 지난 2년 동안 스페인 총리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는 이렇게 말했다. "내 정부는 절대로 노동자들이 이 위기의 대가를 지르도록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5월 12일 그는 정부 지출 삭감을 발표했다. 실업률은 이미 꾸준히 상승해 왔다. 공식 실업자 수만 5백만 명(20퍼센트)이고 일부 지역의 실업률이 그보다 훨씬 높다(안달루시아에서는 30퍼센트). 2008년 스페인에서는 은행 도산 물결이 일어나지 않았다. 정부가 은행과 파산한 부동산 회사들을 은근슬쩍 지원했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주요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자료를 보면, 스페인 부동산 회사들의 부채는 4천4백50억 유로(스페인 GDP의 40퍼센트)에 달한다. 어떤 회사들은 도산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지만 사파테로는 사용자 연합과 보수 야당의 노동시장 개혁(해고 요건 완화)과 재정 지출 삭감 요구를 거부해 양대 주요 노조연맹의 충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5월 12일 그가 갑작스럽게 긴축을 발표하면서 "노동자의 친구"인 척하는 것도 끝났다. 그는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5퍼센트 삭감, '출생수당'(출생 때 2천5백 유로 지급) 폐지, 연금 동결(은퇴 연령 67세로 연장)과 공공지출의 광범한 삭감을 발표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IMF가 주도해 압력을 넣어 — 버락 오바마도 사파테로에게 친히 전화를 걸었다 —, 사파테로 정부는 이제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스페인의 재정적자는 2009년 11.2퍼센트였다. 정부의 목표는 2013년까지 이것을 유럽연합 '하용 수준'인 3퍼센트로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긴축으로 2010년 50억 유로, 2011년 1백억 유로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현 16퍼센트에서 다음 달에 18퍼센트로 인상될 것이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 지원금과 야가나스나 파병군 주둔군 운영 비용은 삭감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이미 서유럽에서 최저 수준인 사회 지출을 줄일 것이다.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 준 5월 29일 긴축 반대 시위

티아구 질루트 좌파블록 활동가

포르투갈 정부는 2단계 긴축 정책을 발표했다.

제1단계는 사회 수당과 실업 수당을 각각 15퍼센트씩 삭감하는 것이다. 법률도 바뀌어 이제 실업자들은 [할당받은] 일자리에서 무조건 일해야 한다. 이것은 공갈협박이다.

사장과 정치인 들은 실업자들이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도록 만들어 전체 임금 수준을 낮추려 한다. 공공 투자 삭감과 공공부문 임금 동결도 진행될 것이다.

제2단계에는 부가가치세 인상이 포함돼 있다. 사람들은 이미 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잔인한 조치들이다.

정부는 또한 금융시스템에서 마지막으 로 남은 공공소유 부문을 민영화하려 한다. 지금까지는 오직 국영은행만이 에너지, 우체국과 보험회사를 소유할 수 있었다.

에게 친히 전화를 걸었다 —, 사파테로 정부는 이제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스페인의 재정적자는 2009년 11.2퍼센트였다. 정부의 목표는 2013년까지 이것을 유럽연합 '하용 수준'인 3퍼센트로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긴축으로 2010년 50억 유로, 2011년 1백억 유로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현 16퍼센트에서 다음 달에 18퍼센트로 인상될 것이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 지원금과 야가나스나 파병군 주둔군 운영 비용은 삭감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이미 서유럽에서 최저 수준인 사회 지출을 줄일 것이다.

좌파

정부 발표를 보면서 스페인 양대 노총인 노동자총연맹(UGT)과 노동자위원회(CCOO)는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UGT는 정부를 "최대한 발주겠다"고 약속했고 CCOO의 지도자 이그나시오 톱소는 정부에게 "전면적 행동"을 위협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그들은 5월 20일 소규모 시위를 조직했고 6월 8일 공공부문 하루 총파업을 호소했다.

사파테로조차 "이해한다"고 말한 이런 소심한 행동에 직면해 스페인 좌파에게 중요한 문제는 노조 지도자들의 총파업 선언을 강제할 만큼 충분히 강한 압력을 만들 수 있느냐다.

만약 저항이 건설되지 않는다면, (자본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불충분한) 현재 긴축 정책에 이어 추가 긴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좌파 노조는 파편화돼 있고 규모도 작다. 2001~2004년에 스페인 반자본주의 운동은 크고 역동적이었지만, 그 활동가들은 작업장에서 영향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저항을 주도할 만큼 규모있는 반자본주의 정당도 없다. 그럼에도, 바스크 지역의 급진 민족주의 연합인 민족주의노동자연합(LAB)과 안달루시아의 안달루시아노동자연합(SAT)은 올해 하루 총파업을 호소해 성공을 거뒀다. 이것은 기층에서 열심히 조직하면 반응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 줬다.

조금씩 전진하는 포르투갈 운동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 준 5월 29일 긴축 반대 시위

티아구 질루트 좌파블록 활동가

포르투갈 정부는 2단계 긴축 정책을 발표했다.

제1단계는 사회 수당과 실업 수당을 각각 15퍼센트씩 삭감하는 것이다. 법률도 바뀌어 이제 실업자들은 [할당받은] 일자리에서 무조건 일해야 한다. 이것은 공갈협박이다.

사장과 정치인 들은 실업자들이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도록 만들어 전체 임금 수준을 낮추려 한다. 공공 투자 삭감과 공공부문 임금 동결도 진행될 것이다.

제2단계에는 부가가치세 인상이 포함돼 있다. 사람들은 이미 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잔인한 조치들이다.

정부는 또한 금융시스템에서 마지막으 로 남은 공공소유 부문을 민영화하려 한다. 지금까지는 오직 국영은행만이 에너지, 우체국과 보험회사를 소유할 수 있었다.

그리스 투쟁에서 새로운 저항 정신이 나타나고 있다

파노스 기르가나스

그리스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 편집자

5월에 IMF와 유럽연합의 긴축 정책에 맞서 그리스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두 번 벌였다. 5월 5일 파업은 시위 대열의 규모가 50만이 넘는 그리스 사상 최대 파업이었다.

경찰이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는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를 발사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마르핀 은행 건물에 불이 나서 은행 노동자 3명이 죽었다.

많은 이들은 파업 노동자들의 에너지와 분노의 폭발이 곧 소진될 거라 예상했다. 확실해 정부와 친정부 언론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

은행원들의 죽음을 시위대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조직적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했다. 은행 노동자들은 5월 6일 파업을 벌이면서 은행 경영진이 총파업 날 근무를 강요했고 노동자들을 적절한 화재 안전 장비도 없는 건물에 가둬 둔 것을 비난했다!

같은 날 노동자 수만 명이 의회를 포위했다. 또, 5월 20일 총파업도 성공적이었다.

단지 IMF가 그리스에 잔혹한 구조조정을 강요했기 때문에 투쟁이 이토록 역동적인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그리스에서는 유럽연합의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이제 더는 아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다.

인터넷 TV 채널 TVXS가 의회한 VPRO 여론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1퍼센트가 유럽연합을 불신한다고 답했다. 세 명 중 두 명이 군비 삭감을 비판다. 놀랍게도 응답자의 32퍼센트가 부채와 이자 상환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런 여론 변화 때문에 양대 정당이 위기에 빠졌다. 5월 6일 사회당 의원 3명이 IMF 정책에 찬성표를 던지기를 거부하자 지도부는 그들을 그리스 사회당 의회 그룹에서 축출했다.

우파인 신민주당도 똑같은 점성에서 분열했다. 신민주당 지도부는 반대표를 던지며 이렇게 말했다. "시위대의 목소리가 유일한 반대 의견인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신민주당의 도라 바코야니스 — 지난해 가을에 당 지도부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 —



총파업이 반자본주의 사상을 확산시키고 있다.

는 지도부의 결정을 따르길 거부했고 출당했다.

따라서 그리스 사회당은 많은 수의 우파 인사와 극우 정당인 라오스(LAOS)의 지원을 얻어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사회당의 기층 당원들은 수긍할 수 없었다. 사회당 창립자인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현 총리의 아버지) 지지자들은 "그리스는 그리스인의 것이지 은행의 것이 아니다"라는 포스터를 제작했다.

정부는 약체졌지만 긴축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른바 연금 '개혁' 법안은 국회에서 6월에 통과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고 여성 공무원들이 현재보다 15년을 더 일해야 은퇴할 수 있도록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들은 이 법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약속했다. 강력한 전력노조 소속 공공전력 회사 노동자들이 연기금을 보호하기 위해 48시간 파업을 벌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그들의 연기금을 놔두겠다고 약속한 다음에야 노동자들은 파업을 철회했다.

투쟁의 방향에 관한 논의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긴축 정책은 지역 정부, 학교와 병원의 일자리, 임금과 연금에 타격을 입힐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은 총파업으로 형성

된 역동성을 이용해 전면 파업을 발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EK는 또한 파업 운동이 은행 국유화, 부채 동결과 유럽연합 규율 거부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은 갈수록 더 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고 다른 좌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래 친유럽연합적 성격을 가진 정당인 시나스피스모스(좌파진보연합)는 6월에 특별 당대회를 열 것인데, 일부 지도자는 유럽연합 탈퇴를 당당명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할 것이다.

시나스피스모스의 지도적 의원이자 탈퇴를 지지하는 파나요티스 라파자니스는 SEK가 개최한 '말시즘 2010' 행사에 연사로 참석했다.

그의 주장은 명확했다. "만약 우리가 유로화와 긴축 반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와 데이비드 하비도 '말시즘 2010'에서 연설했다. 그리스 언론은 둘 모두와 인터뷰했다.

캘리니코스의 인터뷰는 TVXS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하비의 인터뷰는 거의 20만 부가 팔리는 한 주간지에 게재됐다. 그리스에서 반자본주의가 최근한 사상이 되고 있다. 그리스 좌파는 이것을 이용해야 한다.

국가 부채 위기와 유로존의 구조적 약점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이른바 그리스 '구제' 비용의 대가는 그리스 노동자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럽에서 가장 전투적인 노동계급의 반란을 초래했다.

5월 5일 총파업은 대단히 중요했다. 그리스는 자주 총파업이 발생하는 나라다. 그러나 5월 5일은 보통의 총파업이 아니었고, 진정한 노동자 항쟁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아테네 시내의 헌법광장에서는 많은 군중이 국회의사당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시위 진압 경찰과 충돌했다.

노동자들의 분노는 더는 하루 총파업 반복으로 충분히 표현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격(공공서비스, 일자리와 연금 삭감, 퇴직 연령 상향 조정) 정도가 워낙 엄청나 그것을 막으려면 투쟁 수위도 그만큼 높아져야 한다.

하루 총파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가장 큰 공격을 받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무기한 총파업을 벌여야 한다.

전력 노동자들이 이제 투쟁을 발일 예정인데, 그들이 전면 파업을 벌인다면 그리스 전체를 마비시킬 힘이 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 노동자 투쟁은 큰 문제가 있다. 비록 그리스의 급진 좌파는 유럽에서 가장 크지만 그리스 좌파 진영의 주류 세력은 큰 도전

에 적합한 실천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스 공산당은 대형 정당이지만 대단히 종파주의적이다. 공산당의 전략은 '우리에게 답이 있으면 표를 달라'다.

급진 좌파 연합인 시리자는 혁명적 미사여구와 기회주의적 정치를 결합시킨 모호한 태도로 연명해 왔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모호함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그리스 자매 조직인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은 반자본주의연합 안타르시아에 참여하고 있는데, 주변에 세력을 강력히 결집하면서 투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아슬아슬

그리스 밖으로 눈을 돌리면, 전체 유럽으로 긴축 정책이 정신없이 확산되고 있다. 취약한 정부들은 시장을 달래려고 갈수록 긴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그렇고 이국(영국)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경제 위기가 끝났고 이제 지도자들은 경기 회복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환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시장은 현 상황이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깨달았고 있다. 사람들은 이중침체(더블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자본가 계급에게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1930년대의 장기 침체는 다양한 단계를 거치며

거의 10년이나 지속됐다. 오늘날 위기는 당시와 비교할 만하다.

오늘날 경제 위기의 당면한 단계는 이른바 '국가 부채 문제'다.

최근 정부가 막대한 빚을 냈고 이 문제는 유로화 통용 지역에서 특히 심각하다.

정부들은 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엄청난 돈을 지출했다. 그것이 정부 부채를 증가시켰다.

유로화 통용 지역에서 이런 국가 부채 위기는 이 지역의 두 가지 큰 구조적 약점과 결합되고 있다.

첫째, 유로는 순전히 통화 연합이지 재정 연합이 아니다. 유럽연합은 전체 유럽을 상대로 조세를 부과하고 재정을 지출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별로 대처해야 한다.

둘째, 유로화 통용 지역에는 막강한 수출 강국인 독일과 다른 많은 약체 경제들이 뒤섞여 있다. 이 나라들은 독일 상품을 많이 수입하고 그것을 지불하기 위해 특히 독일과 프랑스 은행에 막대한 빚을 내야 했다.

이른바 그리스 구제는 사실상 프랑스와 독일 은행을 구제하려는 것이다. 만약 그리스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면 이미 세계경제 위기로 악화된 은행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지금 이 두 가지 약점이 섞여 상황을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번역 김용욱

건강보험 보장성 논쟁

양보로는 정부 공세에 맞설 수 없다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지방선거 직후 준비모임을 발족하고 건강보험 통합 10주년인 7월 1일을 전후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시민회의를 준비하는 인사들은 현재 60퍼센트 정도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새로운’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시민회의 측은 사용자와 정부의 부담도 늘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용자 정부 부담 비율 인상보다 보험료 인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회의 제안자들은 정부와 사용자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의료 공공성 운동을 ‘당위적 활동’, ‘메시아적 비전’, ‘원리주의적’ 주장이라고 비판한다.

보건 운동판 양보론이라 할 수 있는 ‘시민회의’ 제안자들은 크게 봐 네 가지 배경을 갖고 있는 듯하다.

첫째 그룹은 참여정부 인사들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시민사회정책수석을 역임한 김용익 서울대 교수, 이성재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 그렇다.

둘째 그룹은 진보신당 친화적인 지식인들이다. 정태인 교수와 이진석 교수, 박형근 교수 등이다. 2008년 분당 전에 민주노동당에서 사회연대전략을 주창했던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도 있다.

셋째 그룹은 최근 보편적 복지국가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상이 대표와 최병모 이사장)다.

마지막 그룹은 일부 노조 지도자들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의 주축인 보건의료노조의 나순자 위원장과 사회보험노조의 김동중 위원장이 시민회의 제안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후퇴

‘복지 확대를 위해 정부·사용자뿐 아니라 국민도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의 핵심 내용이었다. 당시 진보진영은 복지 확대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시민회의’의 제안이 ‘새로운 운동’이 아니라 민주당 식 ‘제3의 길’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시민회의의 준비모임’에 우려를 표하며 “대중운동과 동떨어진”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시민회의의 준비모임은 보험료 인상액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지금처럼 낭비적



5월 30일 대학로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반대·건강보험지키기’ 공동행동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으로 단결해야 한다.

지출 구조를 내버려 두고 정부가 약속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면 내년에도 그 이듬해에도 또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할 겁니다. 아니면 다시 보장성을 축소하던가요.

“당장 올해 하반기에 정부가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할 텐데 그때 시민회의는 뭐라고 할 겁니까? 정부가 10퍼센트 제시하면 거기에 30퍼센트 더해서 올리자고요?”

“명백히 운동의 후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보험료를 더 내고 덜 내는 문제가 아니죠.”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지난해 11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보험료 인상은 보험자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경제양극화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렵고 정부의 사회보장지출이 지극히 낮아 보험료 인상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국가 지원비율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보험료 상한선 폐지 등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보건의료노조와 사회보험노조가 조직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위원장 개인 명의로만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노조들 안에서도 만만찮은 이견이 있는 듯하다.

한편, ‘시민회의’ 출범을 앞두고 공공서비스 노조는 산하에 있는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 실장이 보건 운동판 양보론을 적극 주장하는 것에 시급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서비스노조가 ‘시민회의’의 제안을 지지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진영 내에서 지지가 늘지 않아 ‘시민회의’가 언제 출범할지 그리고 보험료 인상 ‘운동’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시민회의’는 기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에 반대해 오른쪽으로 분리해 나간 것이다. 이런 우경적 분열 시도는 운동에 해롭다.

지배계급의 경제 위기 부담 전가 공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지방선거 후 공공 지출 삭감 시도가 더한층 강화될 것이다), 양보론을 내세워 우리 편의 전열을 흐트러뜨릴 뿐 아니라 지배계급 공세에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제공해 줄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운동 대열을 단단히 유지·확대해야 하는 까닭이다.

장호중

IMF 개혁과 금융규제책

G20의 새 포장지를 뜯어 보면

최근 G20은 IMF 개혁과 금융규제책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이 두 의제는 G20이 뭘까 개혁적인 기구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과연 그럴까?

IMF와 세계은행의 지분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각각 5퍼센트, 3퍼센트 이상 이전하겠다는 게 G20의 핵심 개혁안이다. 그리고 IMF 내에서 안전 거부를 위해 필요한 지분을 15퍼센트에서 25~30퍼센트로 확대해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리 되면 IMF 내에서 미국의 지분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G20의 IMF 개혁안은 IMF 지분을 둘러싼 강대국들 간의 극심한 이해다툼만을 조장할 것이다.

IMF의 5대 주주는 미국(17퍼센트), 일본(6.13퍼센트), 독일(6퍼센트), 프랑스(4.94퍼센트), 영국(4퍼센트)이다. 그리고 중국(3.72퍼센트), 러시아(2.74퍼센트)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출자지분이 더 많은 국가일수록 더 많은 투표권을 갖고 더 많은 지분을 행사하기 때문에 일본과 유럽 국가들 그리고 특히 중국이 지분 확대를 위해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지분율이 조정돼 미국과 유럽이 아닌 중국 인민은행장 출신이 IMF 총재직을 맡는다고 해서 IMF 성격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G20은 IMF의 근본 성격을 바꾸려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IMF가 G20에 제시한 경제 정책들을 봐도 IMF의 본질은 여전하다.

최근 IMF는 보고서들에서 “향후 10~20년간 GDP 대비 부채비율을 위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줄이는 긴축정책을 시행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 IMF는 그리스에 긴축 재정을 강요하고 있고 G20이 그 계획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 6월 4일 부산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의 주요 의제는 그리스에 긴축재정을 강요하기 위한 IMF와 G20의 작전 수립이다.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도 IMF

의 악명 높은 구제금융 조건은 바뀌지 않았다.

IMF는 각 나라들에게 구제금융 지원 대가로 고급리와 임금동결, 긴축정책을 요구했다. 이는 해당 국가의 교육·의료 등 사회적 예산 축소를 이어졌다.

이달 초 IMF는 올해 마이너스 12퍼센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라트비아에 재정 지출 추가 축소를 요구하면서 이행되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했다. 헝가리에는 공공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해마다 7퍼센트씩 삭감하라는 긴축 조치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은행세

G20의 금융규제책 중 하나인 은행세는 금융기관들에게 ‘금융안정기금’과 ‘금융활동세’ 등을 부과해 미래의 금융 위기를 대비할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은행세는 마치 골드만삭스 같은 강도들을 처벌할 서슬 퍼런 칼날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이것은 각국 정부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들이 금융기관 구제에 워낙 많은 돈을 지출하는 바람에 재정적자가 매우 심각해 금융위기가 재발할 위험성이 커지면서 금융위기에 대비할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게 핵심 취지다.

금융 규제에 관한 국가별 이해관계가 달라 은행세가 G20에서 순탄하게 통과될지도 의문이다. 지난 4월 미국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총재 회의에서 캐나다와 일본 등의 반대로 은행세가 부결됐다.

더욱이 IMF가 내놓은 조세안이 도입되더라도 다음 금융위기를 해결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8년 미국 정부가 쏟아 부은 금융 구제 비용을 마련하려면, ‘금융안정기금’을 도입하면 23년, ‘금융활동세’를 함께 부과해도 10년이 넘게 걸린다.

운동 진영 내 일부가 G20의 새 포장지인 금융규제책 때문에 G20 활용론을 주장하지만, IMF의 악마 변신 프로그램은 별 실효성이 없고 은행세는 위기 해결책이 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김여진

이주 노동자가 ‘실업의 주범’이라는 거짓말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이 《외국인력의 대체성과 통계 문제》(유경준·김정호 공저)라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를 두고 <동아일보>는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내국인 근로자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실업자가 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읽어 보면 언론 보도가 과장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저숙련 외국인력 유입의 경제적 영향분석》(김정호, 2009)과 《외국인력의 현황과 정책 과제》(유경준·이규용, 2009)에서 수행한 연구를 요약해 발표한 것이다.

김정호(2009)는 “사업장 단위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증가는 내국인 근로자의 실직 또는 이직 위험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사업장 내 동일 직종 외국인 비중이 10퍼센트 상승하는 경우 내국인 근로자의 월별 실직 위험이 0.12~0.24퍼센트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고 밝혔다.

“대체성 정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별 분석에서도 제조업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의 고용이 “부분적으로 보완” 관계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다만, 두 연구는 모두 서비스업 중 음식·숙박업에서는 내국인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과장

유경준·김정호는 이 연구들에서 사용한 통계 자료가 2005~2006년 것이고 그 뒤 이주노동자 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집중된 업종들에서 취업자 증가가 둔화된 주원인이 경기침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외국인력이 어떤 형태에서든

내국인 고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유경준)이 있다고 추정한다.

“어떤 형태”의 영향은 다의적일 수 있다.

예컨대,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가져가는 만큼 그들은 생산과 소비를 통해 경제에 기여하고 이것은 또 다른 일자리를 창출한다.

현대경제연구소의 ‘다문화 시대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2009년 1월)를 보면, 2007년 국내 취업 이주노동자 49만 명은 4조 2천억원의 생산 증대 효과, 2조 5천억원의 소비 증가, 6만 9천 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한국개발원의 연구 보고서, 그리고 그 내용을 과장해 떠들어대는 언론들은 모두 실업 문제의 진정한 주범을 가리고 영웅한 데화살을 돌리고 있다. 경제 위기로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들을 실업의 속죄양으로 삼는 것은 위선이다.

이정원 이주노동자 교육선전차장



2009년 4월 워싱턴에서 열린 IMF와 세계은행 반대시위 G20은 악탈을 일삼는 세계 리더 IMF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

불심검문 강화 법안

“신분증 내놔라, 가방 열어봐라”



사진: 레프트21

왕십리역 역사 안에서 순찰을 돌고 있는 경찰. 이명박은 이제 우리 가방까지 뒤져 '파란색 1번'을 찾으려 한다.

한나라당이 4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분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계약안은 길을 가는 시민의 신분증과 소지품을 확인하고, 지나는 차량을 세워 트렁크까지 뒤질 수 있도록 했다.

심지어 시민들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경찰이 지문 채취나 연고자를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휴대용 조회기로 2009년 5월에만 7천8백여만 건에 이르는 시민 정보를 마구잡이 조회한 경찰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보수 언론조차 “1970~80년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인권 후진국으로 되돌아가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대상자의 가방이나 차량, 선박을 수색할 수 있게 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영장주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빠지면서 검문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 없이 연행도 가능하고 체포·구금·수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계약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하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겉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민주적 권리 공격에 반대하지만 실제 행동은 말과 다른 것이다.

경찰의 불심검문시 임의의 동행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불심검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1987년 6월 항쟁 등을 통해 정취한 성과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하면서 저항을 차단하려고 이런 성과들을 빼앗으려 한다.

이재환

용산참사 철거민 중형 선고

재판부가 진실을 외면하다

5월 3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인옥)는 용산 망루 농성 철거민들에게 4년에서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진압작전은 적법했다”며 “화재 원인은 철거민이 가지고 있던 화염병”이라는 검찰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난 것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경찰특공대원들의 증언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또, 과잉 진압을 인정하는 경찰 간부들의 증언도, 진압 당시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과 일곱차례 통화한 사실을 통해 드러난 불법행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실을 외면한 채 검찰의 손을 들어 줬다. 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 없다며 저항한 철거민을 죽인 것도 모자라 죄까지 뒤집어 씌운 이명박 정부의 손을 들어 줬다.

“법질서 전체를 부정하고 불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저항을 용납할 수 없는 이명박 정부와 기득권 세력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지난 1월 당시 검찰이 은폐한 미공개 수사기록 2천 쪽을 재판부가 공개하면서 희망을 품었던 용산 참사 유



사진: 레프트21

“사법정의”는 있는가? 용산참사의 진정한 책임자들을 피고인석에 세워야 한다.

가족들은 “아버지와 동지를 죽이고 누가 망루 안에서 화염병을 던졌겠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한 재판부가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반발로 교체되면서 이번 판결은 예견된 일이었다. 용산 철거민들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는

각각 대법원에 상고하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원천 무효다. 당장 구속된 철거민들을 석방하고 용산참사의 진정한 책임자들을 피고인석에 세워야 한다.

최영준

성균관대 새 학제개편안

“시장이 선호하는” 대학 만들기

“비전2020은 인문학 말살 정책”

성균관대학교 곳곳에 문과대·사회과학부 교수들의 성명서가 나붙었다. 성명 발표에는 보직교수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교수들이 참여했다. 성균관대에서 문과대와 사회과학부 교수 집단성명은 2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학제개편안인 ‘비전2020’(이하 ‘2020’)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모집단위 광역화’와 ‘교수 성과주의 보상체계 도입’, ‘연구중심·대학원중심 대학’이다.

모집단위 광역화는 일부 단과대만 남기고 현재 인문사회·자연과학 단과대들을 문리대로 전부 통합해 신입생을 모집하고, 3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성균관대 당국은 모집단위 광역화가 ‘학과 간 장벽을 낮추고, 전공진입시기를 지금보다 늦춰 자신의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학부에서 취업과 전공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기초학문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배우고, 전공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상황에서 나중에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 나을 수 있다.

비인기

그러나 그동안 학부제가 표방한 ‘학문간 상호교류를 통한 폭넓은 연구’라는 취지는 고착화된 학문 서열체제 속에서 빛이 바랬다. 기존 학부제 하에서는 대체로 취직이 잘 되는 인기 학과에 학생들이 몰리고 인문학 과들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또, 전공 인원을 제한하고 성적순으로 뽑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학생들은 기초 교양을 차근차근 쌓아 나가기보다는 인기 학과를 가기 위해 고등학교 4,5학년이나 다름없는 치열한 경쟁에 시달렸다.

그런데 ‘2020’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문제를 답습할 공산이 크다.

뿐만 아니라, 성균관대는 ‘학문의 융복합’을 말하면서도 ‘인기학과’인 경영대는 학부통합대상에서 제외했고, 의대와 약대도 학부에 그대로 남겼다. 그러니 ‘비인기학과’만 통합하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만하다.

학교측은 “폐과는 없다”고 하지만, 동시에 “비인기학과는 과의 이름을 바꾸거나 자발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미 현행 학부제 하에서 성대 인문학 교수 숫자는 줄어 들었고, 사회복지학과는 폐과 압력을 받고 있다. ‘폐과가 없다’는 말을 믿는 교수가 거의 없는 까닭이다.

교수들에게 성과주의 연봉제의 칼날을 들

이대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미 성대는 논문 개수로 교수들을 평가하고 있다. 정부와 학교가 정한 특정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이 아니면 논문 취급도 받지 못하고, 영어 논문을 쓰지 않는 교수들은 살아 남기 어렵다.

‘2020’ 반대 교수 성명에 동참한 사회복지학과 박승희 교수는 논문 개수로 교수를 평가하고 줄세우는 제도가 교수들의 연구력을 갉아먹었다고 주장한다.

“차분하게 이론적·사상적 통찰을 하려면 세월이 필요한데,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논문 개수를 채우는 데 급급해] 자신이 쓰고 싶은 책을 쓸 시간이 없어요. 이런 교수들은 무능 교수 취급받고 호봉에서도 차별받습니다.”

‘2020’은 교수 상대평가와 동료평가를 도입해 교수 간 경쟁을 더 강화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교수들은 절대적 논문 개수에 집착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교수들보다 더 많은 논문을 써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

박 교수는 교수들이 논문 점수 채우기에 몰두하는 동안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부실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런 상대평가 하에서는 다른 사람의 논문을 좋게 평가할수록 자신의 서열이 내려가기 때문에 공정한 동료평가가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구중심·대학원중심 대학’도 이미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정부와 주요 대학들이 추진해 온 방향이다. ‘연구중심 대학’은 학부생들에 대한 교양 교육을 중심에 두는 ‘교육중심 대학’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해 기업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되는 연구 성과 위주로 대학원을 육성하는 것을 뜻해 왔다. 성대도 경쟁력 있는 10개 핵심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기존의 학부중심 대학이 이런 방향을 추구하면 학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기초교양을 탄탄히 쌓을 수 있게 하겠다는 학교측의 주장과 모순된다. 한편, 연구중심대학에서는 산학협력이 강화돼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기업의 입맛에 맞는 연구에 치중하게 될 것이다.

성대가 밝힌 ‘2020’의 목표 — ‘시장이 선호하는 졸업생’, ‘기업평판도 아시아 Top10’, ‘수능 1퍼센트 학생 비중 30퍼센트’ 등 — 는 이것이 결국 대학을 이윤 창출에 종속시키고, 대학·학문의 서열화에 적극 편승하는 새로운 이름의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2020’에 반대하는 성대 교수와 학생들의 정당한 목소리가 경쟁지상주의 대학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기를 바란다.

최미진

대학생다함께 회원 총회

“운동 속에서 참을성 있게 조직하자”

6월 2일, ‘대학생다함께’ 회원들은 총회를 열어 상반기 활동 평가를 했다.

김세란은 지금은 청년들이 거리를 메우던 2000년대 초중반과 달리, 조직된 운동 세력들이 경제 위기 속에서 이명박 정부의 탄압을 뚫고 힘겨운 참호전을 벌이는 중이라고 발표했다. 팽팽한 세력관계 속에 노동계급 대중은 사기가 높지 않지만 패배감에 좌절하는 상황은 아니며, 따라서 ‘넓고 긴 시야로 운동 속에서 조직과 의식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함께가 폐단 간행물을 판매하며 지인을 만들고 참을성 있게 토론하자고 강조했다.

‘대학생다함께’는 올해부터 격월간 《대학생 레프트 리뷰》를 펴내기 시작해 최근 3호까지 냈고, 2호를 산 사람들 중에는 학생회 활동가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한다.

김세란은 이런 간행물을 읽고 기고하고 판매하는 데 모든 회원이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러 회원들이 각자 활동에서 얻은 성과

나 교훈을 발표하며 1시간 넘게 열정적으로 토론했다.

고려대, 건국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회원들은 학생회 활동 경험에서 우러난 생생한 발언들을 들려줬다.

“학생회 활동을 통해, 개인적 삶에만 머물되지 않는 헌신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바쁘다고 정치적 판단을 미루서는 안 된다”, “다른 정치 경향과 다함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둘 다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런 발언들은 회원들에게 많은 자극을 줬고, 이 경험과 배움들을 잘 정리해 간행물에 싣고 남겨야 한다고 했다.

또, 여러 회원들은 다함께가 7월에 여는 진보 포럼 ‘맑시즘2010’이 본격적인 홍보를 시작한 후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전했고, 그동안 캠퍼스에서 만난 지인들을 적극 초대해 정치적 궁금증들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로 삼자고 말했다.

여승주

보수·우익 지배자들은 틈만 나면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사회통제를 강화하려 했다.

그리고 '북한 위협'의 '결정적 증거 1번'이 한국전쟁이었다. 우익은 한국전쟁을 체제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이용해 왔다. 이 때문에 한국 현대사에서 해방부터 한국전쟁에 이르는 기간은 치열한 이데올로기 전장이기도 하다.

우익은 한국전쟁이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방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상당수 좌파는 한국전쟁을 모종의 민족해방 전쟁이나 혁명전쟁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두 주장 모두 틀렸다. 한국전쟁은 당시 미국과 소련이 벌인 냉전 경쟁의 산물이었다. 전쟁을 벌인 두 진영 모두 자유와 인권, 또는 해방의 주체들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이 우익 정권이고, 이들이 한국전쟁 60주년을 계기로 각종 안보 캠페인을 벌여 사회를 오른쪽으로 이끌려 하느니만큼, 이 글에서는 우익의 위선을 들춰내는 데 좀더 비중을 두겠다.

뉴라이트는 본단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미국이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자고 소련에 제안하지 않았더라면 한반도 전체가 ... 공산화의 운명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38도선은 단순히 한반도의 분할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자유, 인권, 시장 등 인류 보편의 가치가 미국군을 따라 한반도에 상륙한 북방한계를 나타내는 선이었던 것이다.(교과서포럼, 《대안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기파랑)

분단 때문에 생긴 수많은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역사인식이다.

애초 소련군의 대일본전 참전을 요구한 게 미국이었다. 미국은 참전 대가로 소련에게 중국 동북부의 이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물론, 원자폭탄 개발 이후 소련에 한 약속을 후회했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38선을 그어야 할 상황을 만든 것도 미국 자신인 셈이다. 미국은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는 것을 막으려고 38선을 제안했고, 소련은 향후 일본 점령에서 지분을 얻으려고 38선 제안을 불만 없이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한반도에서 벌어질 온갖 고통과 재앙의 씨앗이 뿌려졌다.

앞서 뉴라이트가 미군을 따라 남한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목록 중 앞의 것 두 개 — 자유·인권 — 는 미군의 상륙 휴대품 중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나머지 한 개 — 시장 — 는 조선 민중이 바라지 않은 것이었다.

민중이 원하지 않은 분단

미국이 세운 이승만 정권은 “자유”나 “인권”과는 아무 상관 없었다. 예를 들어, 1949년 강원도에서 미국은 남한군이 공산주의자 40여 명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놀랍게도 남한군은 그들을 총검술 훈련용 표적으로 삼아 죽이고 있었다.

한국전쟁이 벌어지기도 전에 경찰과 군대, 우익 폭력단체들은 벌써 남한 주민 수만 명을 잔인하게 학살했다. 1948년 제주항쟁에서만 3만여 명이 살해됐다. 미국은 이런 극악한 자들의 뒤를 바쳤고, 필요하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서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시장이 인류보편적 가치라는 주장을 당시 조선 민중이 들었다면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조선 민중은 모종의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통해 새 국가가 건설되길 원했다.

미국이 강요한 ‘자유주의’ 경제정책은 노동자들의 민주적 자주관리 운동을 부정했고, 곡물 공급의 자유시장화는 식량 배급 체계를 교란시켰다. 도시 주민은 굶주렸지만, 지주와 악덕상인은 배를 불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이 된다. 보수 언론들은 이미 한국전쟁 연재 기사를 실으며 ‘용감하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킨 전쟁’으로 미화하고 있다. <레프트21>은 한국전쟁의 진정한 성격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다. 기아가 만연했음에도 일본으로 쌀 수출은 계속됐다.

물론, 소련이 세운 북한 체제 역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소련 역시 노동자자주관리 운동을 부정했고, 인민위원회는 자치적 성격을 잃은 채 소련 정책의 전달벨트로 전락했다. 소련의 지령에 따라 진행된 ‘인민민주주의 혁명’ 결과 북한에서는 국가가 자본축적을 관장하는 체제가 성립됐다. 식민지 시절 김일성이 민족해방 투쟁을 한 것은 맞지만, 또 다른 제국주의 세력인 소련에는 매우 의존적이었다.

두 분단 국가의 탄생은 냉전의 산물이었다. 조선 민중 누구도 이런 식의 분단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열강은 한



점령군 대장 맥아더와 친미주의자 이승만

반도의 지정학적 이익 때문에 누구도 통일정부 수립에 열의가 없었고 대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각각의 폭두각시들을 내세워 분단 정부 수립에 몰두했다.

남한 우익은 김일성의 호전성만 부각하지만, 사실 남·북 정권 모두 상대방을 진정 타도하고 싶어 했다.

1949년 들어 김일성은 무력으로 국토를 통일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전쟁 지원을 끊임없이 요청했다. 모택동에게는 중국군 소속 조선인 부대를 넘겨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즈음에 스탈린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

이승만의 무력 통일외지 또한 김일성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다. 이승만이 정말로 복침을 감행할까 봐 미국이 노심조사할 정도였다. 브루스 커밍스가 적절히 묘사했듯이 “이승만은 종종 주인이 줄을 잡고 있는데도 목걸이에 걸려 거의 질식할 정도로 뛰어나가려고 발버둥치는 사냥개처럼 보였다.”

게다가 1949년 여름까지 군사력은 남한이 우월했다. 이승만은 38선 도발과 더불어 (북한과 마찬가지로) 계필라를 침투시켜 각종 암살, 파괴 행위를 저질렀다. 이 무렵 남과 북이 벌인 38선 총돌은 각각 자신의 상전에게 통일전쟁을 지원해 달라는 일종의 시위 성격이 강했다.

서로 으르렁거리던 개들의 목줄을 먼저 놓은 쪽은 스탈린이었다. 1950년 1월에

스탈린은 동아시아 정책을 더욱 공세적으로 전환했다. 스탈린은 1945년 이래 승인하지 않고 있던 베트남의 호치민 정권을 공식 승인했고, 일본공산당의 ‘평화혁명노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미국에 맞서 과감하게 투쟁하라고 촉구했다.

스탈린의 이러한 전환에는 이 무렵 급격히 뜨거워진 냉전이 배경이 됐다. 소련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해 미국의 핵독점이 무너지자 미국의 소련 봉쇄정책은 더 공세적으로 됐다.

호전적인 남북정부

특히, 아시아에서 냉전은 더 뜨거워졌다. 미국은 마오쩌둥이 중국을 석권하자, 동아시아 전략의 중심을 중국에서 일본으로 바꿨다. 미국은 소련을 무시한 채 일본과 단독강화를 추진하고, 과거 군국주의자들을 복권시키고, 일본을 재무장시키기 시작했다.

이에 대응해 소련은 1950년 2월 중소동맹을 맺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미일 단독강화]를 저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미국은 마오쩌둥이 최종 승리하자 소련과 중국 사이를 이간질해 소련을 고립시키려는 이른바 ‘췌기전략’을 구사했는데, 이는 오히려 스탈린의 대미 경계심을 강화해 주었다.

스탈린이 김일성의 전쟁을 승인할 즈음, 트루먼 역시 새로운 전략을 구상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NSC 68이 등장했다.

이는 소련진영에 대한 봉쇄와 더불어 ‘볼백’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훗날 애치슨은 “한국전쟁이 우리를 구했다”고 한 적이 있는데, 한국전쟁이 미국의 군비를 대폭 증강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소련과 본격적인 군비경쟁에 돌입했고, 서방진영을 결속할 수 있었다.

이승만은 얼마 전까지 조선을 지배했던 일본을 ‘반공을 위한 동맹’이라고 선언했고, 미-소 간 3차대전을 일으켜 본토로 귀환하겠다는 망상을 품은 장제스와 함께 태평양군사동맹을 주장했다. 장제스의 핵심 측근 샤오유린은 한반도를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최적의 장소로 생각하고는 적극적으로 분쟁을 조성해야 한다고 장제스에게 권유했다. 어쨌든 맥아더는 이승만-장제스 듀엣의 ‘북벌’ 합창을 경청해 주었고,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더욱 공세적 태세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식으로 동북아시아에서 긴장은 급상승했다. 장군명군 식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과정은 미국과 소련 모두에 책임이 있었다.

뜨거워진 냉전

그런데 스탈린은 이즈음 동북아시아에서 정세가 미국보다는 소련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생각한 듯하다. 소련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했고, 결정적으로 마오쩌둥이 중국을 석권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 같은 작은 땅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개입하려 할까? 장제스가 무너져 내릴 때,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다.

게다가 애치슨은 남한을 자신들의 직접 방위선에서 제외한 선언을 막 발표했다. 비록, 애치슨 선언이 미국으로서는 ‘전략적 유연성’을 표명하는 것이었지만, 스탈린은 이를 미국 봉쇄선의 한계 표명으로 여긴 듯하다. 그리고 실제 남한에서 미군은 철수한 상황이었다. 혹시 미국이 개입한다 해도 소련은 미국과 직접 충돌을 피할 수 있다. 중국군이라는 보험이 생겼기 때문이다.

결국, 남한 침공은 성공 확률이 높아 보였고, 소련이 져야 할 위험부담은 크지 않아 보였다. 김일성이 성공한다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상은 크게 떨어질 것이고, 미국은 전반적으로 수세에 몰릴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전면적으로 남진했다. 남한군은 패주를 거듭했다. 미군사고문단이 보기에 “남한군은 저항 능력이나 싸우려는 의지가 없으며, 총체적인 붕괴가 임박했다.” 평소 남한군 고위 장교들은 일본도를 차고 다니면서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기생집에서 허풍떠는 데는 유능했지만, 정작 북한 정규군을 저지하는 데서는 무능했다.

이승만은 “국군이 복진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몰래 야반도주했다. 서울의 고위층과 부유층은 공황에 휩싸였다. 국회는 서울 사수를 결의했지만, 국회의원들은 결의문이 낭독되기 무섭게 집을 싸들고 도망쳤다. 심지어 이승만은 피난민들로 가득 찬 한강철교를 폭파시켜 버렸다. 수백 명이 한강에 떨어져 죽었다.

이 혼란의 와중에도 이승만은 잠재적으로 북한에 협력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범들과 보도연맹원들을 대량 학살했다. 10만~30만 명이 살해됐다.

북한군이 남진했을 때, 이승만을 돕기 위해 궤기한 남한 주민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일부 주민들은 북한군을 적극 환영했다. 북한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만불손한 독재를 자행해 온 이승만 ... 이놈이 한 번 혼이 나면 얼마나 통쾌할까?” 하는 심정도 들었던 듯하다.

이승만이 기밀 곳은 오직 미국뿐이었다. 그리고 미국이 즉각 개입을 선언하자 그는 안도의 한숨과 더불어 북한의 침공이 어쨌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규한

최저임금 — 먹고 살 만큼은 올려라

2011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경제 위기 이후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최저임금은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저임금도 형편없이 낮아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총을 비롯한 기업들은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고 아우성이다. 경총은 뽀뽀스럽게도 '최저임금을 36퍼센트 삭감하는 게 적절하지만 여건상 동결을 제안한다'고 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보다도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너무나 낮게 책정된 최저생계비다. 50만 원으로 한 달을 살라는 최저생계비에 책정된 6만 원도 안되는 주거비로는 고시원 쪽방 하나도 빌릴 수 없다. 하루 4천 원으로 책정된 식비는 라면만 먹고 살라는 것과 다름없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LO와 OECD도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저임금계층 일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최저임금 시위

그동안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올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총액 대비 29.9퍼센트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계속 정체 상태에 있다. 지난 20년간 명목최저임금은 7.33배 올랐지만,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은 7.57배, 국민총소득은 7.65배가 올랐다. 최저임금 상승은 GDP 성장률에 못 미쳤다.

반면 지난해 국회의원들의 재산은 평균 6억 1천5백만 원 증가했고, 이명박 정부의 감세로 부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재산을 불렸다. 이런 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시급 5천1백80원)으로 인상하자는 민주노총의 요구는 정당하다. 6월 말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계획하는 투쟁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자.

조명지

월드컵, 민족주의, 상업주의

바야흐로 월드컵의 계절이다. 전 세계 수십억 축구팬들은 모두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이다.

축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다. 그리고 월드컵은 전 세계에서 열리는 모든 축구 경기의 꽃이라 할 수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연인원 4백억 명이 TV로 월드컵을 시청했다 한다.

노동자들이 단조로운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없는 이변이 속출하고, 강대국 팀이 약소국 팀에게 패배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사람들이 축구에 열광하는 이유일 테다.

평범한 사람들이 축구에 열광하기 때문에 축구는 흔히 지배자들의 유용한 지배 수단으로 이용됐다.

신화

월드컵은 국가 대항전이다. 제1회 월드컵 대회 당시 우루과이 대표팀 감독은 아르헨티나와 벌인 결승전이 '단순한 팀 대결이 아니라 국가 간의 대결'이었다고 회고했다.

각국 지배자들도 월드컵을 이용해 국민적 단결의 신화를 만들어 내고 이를 민중의 저항을 잠재우는 데 이용했다.

한국 지배계급도 일찌감치 국가적 차원에서 축구를 집중 육성했다. 1970년 박정희의 친인척인 대한축구협회장 장덕진은 "축구를 통해 민족의 단결"을 이끌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북한의 1966년 월드컵 8강 돌풍에 자극받아 중앙정보부가 국가대표팀 상비군을 직접 운영했고, 박스컵 대회를 신설했다. 1980년대부터는 국가 주도의 축구에 기업이 뛰어들기 시작했다.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의 공식 슬로건은 '승리의 함성, 하나 된 한국!'이다. 이명박 정권은 한국의 극심한 사회적·정치적 양극화를 '대~한민국' 함성으로 덮어 버리고 싶을 것이다.

대다수 한국인들은 월드컵에서 한국 팀이 이기기를 바랄 것이다.

만약 미국이나 일본 같은 제국주의 국가 팀과 경기한다면 그런 심정을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한국 팀은 나이지리아·그리스·아르헨티나와 경기한다.

이 경기들에서 한국 팀을 응원하는 것은 배타적 민족주의다. 이 나라들이 한국인을 억압한 적도 없고 그 역도 마찬가지



서울의 한 거리에서 열린 월드컵 열풍 열거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 거리 응원 이명박은 월드컵의 '대~한민국' 함성으로 불만과 갈등을 가리고 싶어 한다.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과의 경기에서 한국 팀을 응원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월드컵은 또한 상업주의의 전당이기도 하다. 1970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TV 중계가 본격화하면서 월드컵의 상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됐다. FIFA는 다국적 기업들과 공식 후원사 계약을 맺어 막대한 수익을 얻고, 다국적 기업은 월드컵 경기장을 광고의 장으로 적극 활용한다.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때로는 축구 규칙도 바꿨다. 애초 16개국이었던 본선 진출국 숫자를 24개국으로, 그리고 지금의 32개국으로 늘린 것도 TV 중계 시간을 늘려 그만큼 광고 수입을 올리려는 FIFA의 상업화 구상과 맞닿아 있다.

민족주의와 상업주의가 교차하는 월드컵을 우리는 지난 2002년과 2006년 월드컵 때 서울광장에서 목도한 바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맞아 SK텔레콤은 응원 티셔츠 12만 장을 뿌리고

응원곡을 제작·유포하는 등의 마케팅으로 적어도 5백억 원 이상의 홍보 효과를 누렸다고 한다.

부패

이렇게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고 상업주의가 활개를 치는 월드컵을 관장하는 FIFA는 올림픽을 책임지는 IOC와 더불어 비리의 온상이기도 하다.

특히 월드컵, 청소년 대회 등을 유치하려는 국가들은 결정 권한이 있는 FIFA 집행위원 24명을 상대로 뇌물적이지든 은밀하게든 뇌물 공세라도 해야 경쟁국을 이길 수 있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미디어 재벌 레오 키르히는 친선경기의 대전료를 명분으로 태국·몰타 등의 FIFA 집행위원들에게 '합법적으로' 30만 달러씩 지급했다. 독일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전차 미

사일 1천2백 기를 보내 주겠다는 약속으로 유치 지지를 끌어냈다.

월드컵 중계권을 획득해 중계권 협상을 대행해 온 ISL이 파산하는 과정에서 20여 년간 ISL이 FIFA 대의원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FIFA는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여전히 ISL과 맺은 계약과 유사한 방식으로 중계권 협상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축구에 열광하지만,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등장한 축구는 언제나 '스포츠 그 이상'이었다. 태극기든 삼성 로고든 국가와 기업의 상징물이 박힌 유니폼을 입고 선수들이 뛰는 한, 축구 경기장에서 스포츠에 대한 순수한 열정만을 보기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월드컵을 즐기되, 월드컵의 추악한 이면도 함께 보아야 할 것이다.

김영익

남아공 반자본주의 활동가 패트릭 본드 인터뷰

“월드컵 기간 시위 금지 명령을 어길 것입니다”

반자본주의 활동가이자 남아프리카공화국 크와줄라 나탈 대학교 교수인 **패트릭 본드**가 월드컵을 앞두고 남아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한다. **패트릭 본드**는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대안세계화운동과 한국의 대안이념”에 참석하려 방한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케이프타운과 뽀뽀벨라의 일부 주민들을 강제로 몰아내고 월드컵 경기장을 지었습니다. 또, 노점상이 거리에서 물건을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부들의 물고기 잡이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경기장을 짓기 위해 원래 살던 사람들을 내쫓은 것은 취리히의 FIFA 본부에 게 우리 공간, 우리 사회와 우리 주권을

넘긴 것입니다. FIFA는 온갖 더러운 뒷거래를 하는 부패한 마피아들입니다. 그들은 남아공 정부도 부패의 사슬에 연결시켰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막대한 돈을 들여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구 경기장을 지었습니다. 월드컵 폐막 이후에는 텅 빈 경기장을 짓는 데 엄청난 돈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유의 날’

그러나 정부는 지역 사회의 고충에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남아공은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남아공의 높은 물가, 물과 전력의 사유화, 일자리 부족 등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경기장 반경 10킬로미터 내에서 어떤 시위도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7월 15일까지 모든 시위를 금지합니다. 그러나 활동가들은 “우리는 시위를 권리가 있고 정부의 명령을 어길 것입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위는 6월 16일 시위입니다. 1976년 같은 날 소웨토에서 흑인 학생들이 항쟁을 시작했고 2주 동안 1천 명이 살해당했습니다.

활동가들은 6월 16일을 가장 중요한 기념일 중 하나이자 ‘자유의 날’로 여깁니다.

지금 매일 다양한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통계를 보면 매일 시위가 40건 일어나는데, 주로 불만과 고통이 큰 저소득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최근 대단히 성공적인 파

업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월드컵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많이 파낸다는 것입니다. 대형 운수 노조는 남아공 최대의 항만과 철도에서 파업을 벌여 물가 상승률(6.5퍼센트)보다 감절 높은 임금 인상(13퍼센트)을 따냈습니다.

월드컵 전에 파업한다는 것은 합리적 전략이었습니다. 전력 부문, 지역 공무원, 공공부문 노동자와 일부 민간 부문 노동자들도 가세하면서 더 많은 파업이 발생할 것입니다.

쟁점은 노동운동이 그 에너지를 전력요금 인하 등 사회적 요구로 전환시킬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터뷰 장호중·박준규

녹취·번역 김용욱

맑시즘2010

7.22(목) - 25(일)
고려대학교 (섭외중)

끝나지 않은 위기, 저항의 사상

주최: 다함께

I 세계경제 위기 분석, 350만 그리스 총파업 소식을 들려줄 국제 활동가들



파노스 가르가나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SEK)의 창립자이자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

- 유럽의 재정 위기와 그리스 노동자들의 저항
- 레닌의 전략과 전술
- 유럽의 신파시스트



조셉 추마 마르크스주의 경제 분석 저술가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 경제 위기는 끝났는가, 이제 막 시작인가?
-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정부들
 -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 변화하는 세계 체제
 - 미국의 세기인가, 다극화된 세계인가?

II 노동운동 · 사회운동의 리더, 활동가, 명연사들이 온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최일봉 다함께 운영위원
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 저자



김진숙 <소금꽃나무> 저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이유진 녹색연합 정책위원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한홍구 <대한민국사> 저자
미셀 이주노조 활동가



III 농칠 수 없다! 대가에게 듣는 명강연



한홍구 <대한민국사> 저자

- 민주주의를 향한 저항의 역사 - 5·18에서 1987년까지



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좌파 현대세계경제론의 비판적 재구성 - 하비, 아리기, 브레너를 중심으로



최병두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 신자유주의 도시화와 도시 정책



손낙구 <부동산 계급사회> 저자

- 부동산 거품, 미국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가제)



신정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스웨덴 모델 - 복지국가의 역사와 교훈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노동운동은 여전히 희망인가



김진숙 <소금꽃 나무> 저자

경제 위기 시대,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



최일봉 다함께 운영위원이자

국내 최초 트로츠키주의자



- 트로츠키의 마르크스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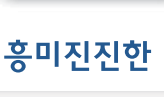
김동광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

- 유전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가?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성범죄 · 사이코패스 - 범죄의 정치경제학



천보선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

- 비교초기와 참교육

IV 뜨거운 현안과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이 만나는 흥미진진한 포럼들이 더 있습니다



- 기후변화가 아니라 시스템 변화를 - 에너지 · 사회 체제 전환과 녹색 일자리

이유진 녹색연합 정책위원

장호중 <레프트21> 기자

이정호 민주노총 정책국장



- 이명박 정부의 이주 정책과 인종주의

미셀 이주노조 활동가



- 지방선거 이후 진보진영이 갈 길

김인식 <레프트21> 편집자



- 프랑스 반자본주의신당 NPA

이기웅 경북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 지각 변동 중인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김하영 <마르크스21> 편집자



- 동성애자 권리와 노동자 투쟁

곽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 한국 경제, 불안정한 회복의 미래

강동훈 <레프트21> 기자



- 사회적 공헌으로 기업은 착해졌는가?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중국은 자본주의 경제의 미래인가?

이정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

교수(중국경제 전공)



- 텐안문에서 티베트까지 - 중국의 저항운동

김용욱 <레프트21> 기자

미국에 이어 유럽을 뒤흔든 세계경제 위기

- 금융 세계화 - 금융의 발전으로 자본주의가 변했는가
- 신자유주의는 무엇이고, 이제 끝났는가
- 케인스주의는 무엇이고, 경제를 구할 수 있는가
- 민주적 계획경제 - 경제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게 가능한가

한국 경제와 대안 찾기

- 발전국가론으로 한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가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왕초보를 위한 자본론

- 부는 누가 만드는가 - 자본가인가 노동자인가
- 자본주의는 왜 위기에 빠지는가

마르크스주의 방법

- 유물론과 변증법
- 소외

그 밖에

- 노무현과 진보, 동반자인가
- 낙태 - 죄인가 여성이 선택할 권리인가
- 21세기 여성해방
- 교육을 지키기 위한 투쟁
- 의료 민영화 어떻게 막고, 의료보험 보장성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 G20의 쟁점과 대응
- 분단과 한국전쟁
- 타이 민중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 세계는 왜 이토록 가난한가? 자선으로 제3세계를 가난에서 구할 수 있을까

내가 맑시즘을 추천하는 이유

‘다함께’ 회원이 아니면서도 내가 매년 ‘맑시즘’ 행사에 찾아가는 이유는, 요즘 같은 시대에 수백 명의 청년, 학생, 노동자, 시민들이 ‘맑시즘’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며칠 동안 북적거리는 장면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기 때문이다. 정파를 초월하여 모인 사람들이 수십 개의 강의와 토론으로 밀도 있게 시간을 채우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아직 희망을 버릴 때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목덜미 목덜미하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한동안 버틸 힘을 얻는다.

-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

농업 코문과 환대의 사상가로 불리는 피터 모린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아무도 부유해지려고 하지 않으면 모두가 부유해질 것이다. 모두가 가난해지려고 하면 아무도 가난해지지 않을 것이다.”

맑시즘2010은, ‘탐욕’을 추구하지 않으며 ‘거짓’을 말하지 않고 ‘무력’과 ‘권력’으로 누군가를 억압하지 않는 것을 ‘바보’ 같다고 여기는 우리 사회를 향해 무엇이 진실인지를 이야기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더 선하고 정의롭기 위해 모이고 토론하고 대안을 찾습니다.

- 이유진 녹색연합 정책위원 -

알찬 방학 · 알찬 휴가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

지금! 참가신청하세요

www.marxism.or.kr

02-2271-2395

marxism2010@marxism.or.kr

참가비: 하루 13,000원(22일만 7,000원)

나홀 40,000원

● 대학생 할인 하루 11,000원(22일만 5,000원) / 나홀 30,000원

● 청소년 · 이주노동자 · 장기투쟁 작업장 노동자 할인

하루 5,000원(22일만 3,000원) / 나홀 15,000원

● 10명 모아 할인 반재 단체할인

동아리 · 학생회 · 노동조합 · 소모임 등 한 단체에서 10명 이상, 나홀 티켓을 구입하면 15퍼센트 추가 할인!

· 단체할인가 34,000원 · 대학생 25,500원

· 청소년 · 이주노동자 · 장기투쟁 작업장 노동자 12,500원

맑시즘2010을 주변에 널리 알려 주세요

혼자라도 망설이지 마세요! 대안을 찾는 수많은 벗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놀이방 · 문화행사 · 서점

- 영화와 음악 등 문화행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좋은 사회과학 서적을 대폭 할인 (10~50퍼센트) 판매합니다.
- 어린이 놀이방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미리미리 신청하세요.
-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휠체어를 무료 대여해 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marxism.or.kr 에서 확인하세요.

세상이 바뀔까 묻는 사람들에게 ④

언론이 대중의 의식을 지배하는가

다섯 호에 걸쳐 실리는 이 연재는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흔한 물음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장호종**이 언론이 대중의 의식을 좌지우지한다는 주장에 도전한다.

이명박 정부가 YTN과 KBS에 이어 이제는 MBC마저 접수하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우파 정권의 언론 장악(시도)에 반발하고 우려한다. 우파에 의해 장악된 대중 매체가 사람들의 의식에 미칠 부정적 영향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는 일관된 민주주의자로서 정권의 언론 통제와 장악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실제로 언론은 이 사회를 지배하는 자들 — 대기업 총수들, 정치인들, 고위 국가관료, 군 장성들 — 이 오랫동안 발전시켜 온 계급 지배 도구다.

대중매체는 소수의 지배자들이 대중의 의식에 영향을 끼치게 해준다. 그래서 지배자들은 자본주의 초기에는 주로 교육받은 부르주아지들의 전유물이던 언론(당시에는 신문)을 대중 매체로 발전시켰다.

거듭되는 반란과 혁명 등을 보면서 지배자들은 총과 칼만으로 노동계급을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배자들은 결정적 위기에 빠질 때에는 주저하지 않고 무력을 휘두르지만, 물리적 수단의 남발은 지배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약점이 있다.

저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노동계급을 체념하게 만들고, 서로 이간질시켜 단결을 가로막고, 소외감을 달래주는 하지만 삶에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연예, 스포츠 등에 열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칼 마르크스는 1845년에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이런 현상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설명한 바 있다.

“어떤 시대에도 지배계급의 사상이 지배적인 사상이다. 즉, 사회를 지배하는 물질적 세력인 지배계급이 그 사회를 지배하는 정신적 세력이기도 하다. 물질적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계급이 정신적 생산수단도 통제한다. 따라서, 대체로 말해서, 정신적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사상은 그것[물질적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계급]에 종속된다.”

지배계급의 사상

그러나 대중매체의 영향력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대중의 직접 경험이 대중매체의 주장과 어긋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중매체의 주장을 사람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와 주류 언론의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이들이 제시하는 증거가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훨씬 많다.

특히 경제 위기가 심화할 때 주류 언론이 전파해 온 신화는 극적으로 허물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근로 민중이 대중매체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고 거부할 가능성이 특히 높은 경우는 그들이 집단적 투쟁을 벌일 때다. 왜냐하면 그럴 때는 그들 자신이 뉴스의 초점이 되고 그들 자신의 행동과 경험이 거짓말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존 볼리뉴, 〈레프트21〉 2호)

공장 점거 파업을 벌이던 쌍용차 노동자들이 이를 비난하는 〈조선일보〉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기란 어려운 일이다. 2008년 촛불항쟁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일보〉의 현관 앞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기업주들에게 항의해 광고를 끊도록 했다.

한편 언제나 대중매체가 전파하는 세계관을 거부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인 대중매체를 거꾸로 활용해 대안적 세계관을 전파하려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주류언론의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없다. 첫째, 언론 매체 대부분을 자본가들이 통제하기 때문이다.

둘째, 주류 언론이 퍼뜨리는 사상의 일부는 일상적 시기에 사람들의 경험과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계급을 이간질시키는 각종 이데올로기들이 그렇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지배력은 단순히 언론사 사주가 만든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가 계급의 지배 즉, 체제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안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되는 최상의 조건 즉, 투쟁을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도록 가교를 놓아 줄 언론이 필요하다. 〈레프트21〉처럼 말이다.

무엇보다 노동계급에 대한 대중매체의 지배력을 분쇄하려면 자본가 계급의 권력 전체를 분쇄해야 한다. 위기 상황과 대중 투쟁뿐 아니라 이런 대안적 매체를 가진 혁적 조직이 필요한 까닭이다.

우석균 칼럼

이제부터 할 일은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는 것일까?

우석균 의사/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 거부당했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달리 국민들은 투표장에서 또 한번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다. 지난 2008년 2월 총선보다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광장으로 모일 길이 막힌 촛불들이 투표장으로 모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에게 반성을 하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자신만만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이 정부를 거부했다.

이명박 정부는 압승을 예상하고 지방선거 직후부터 ‘명박본색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선거 일주일 전에 국무회의에서 여의도 국제무역항 설치를 통과시켰고 선거 이틀 전에는 지방선거 후 영리병원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이번 선거 결과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명박본색 정책’의 속도나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자신의 정책들을 중단할까? 로이터통신은 선거결과가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개혁’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선거 직전 이 대통령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더욱 국정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이 정권이 진정으로 신경쓰는 것은 민심이 아니라 재정적자다. 한국은 2008년과 작년, 금융회사와 건설사 등에 쏟아부은 천문학적 액수의 돈으로 OECD 국가 중 국가채무 증가가 가장 빠른 나라(2008년 18.4%, 2009년 11.4%)다.

공공지출 삭감

한국도 이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재정삭감 즉 공공지출 삭감에 나설 수밖에 없다. 5월 9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2010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2014년까지 균형재정을 맞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재정부는 2013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했다. 공공지출 삭감의 시기가 시작된 것이다.

공공지출의 삭감은 그리스와 유럽에서 보듯이 곧 복지재정 삭감, 임금 삭감, 연금 삭감 등을 뜻한다. 당장 재정전략회의의 결론은 이렇다. “사회복지제도 등을 개혁하지 못한 남부유럽국가들이 왜 재정위기에 빠졌는가를 반면교사로 삼아 “나눠주기식 복지가 아니라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산적 복지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는 것이다.

세금도 늘린다고 한다. 그러나 법인세나 부동산 관련 세금이 아니다. 당장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이 줄을 이어 기다리고 있다. 서민들에게 돈을 더 건넸다는 것이다. 세입을 늘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따로 있다. 공기업 민영화다.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이미 민영화가 진행 중인 9개 말고도 15개 공기업을 더 내다팔겠다고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이 그것이다. 이 기업들은 적자를 보는 기업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알짜배기 기업들이다. 물론 이들 기업들은 국가기간산업이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은 국가금융정책에 필수적인 국영기업이다. 민영화에 따른 요금인상이나 대규모 해고는 어떻게 하느냐고 묻지마라. 부자들과 금융회사와 건설회사를 위해 살리기 위해 국고를 퍼주던 자가 이제 다시 국고열쇠를 열어 공기업들을 내다팔겠다고면서 이것이 ‘경제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방선거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현실이다. 또 공기업의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도 더욱 강력해질 것이다.

민영화 조처는 이것만이 아니다. 촛불 앞에서 한 “대운하, 가스, 전기, 물, 건강보험 민영화는 없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아직도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정부는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안을 올해 중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아직 민영화하지 않은 몇 안되는 가스분야인 발전용 가스사업 분야까지 민영화 하겠다는 것이다. 원가이하로 공급하는 가정용 가스의 적자를 발전·산업용가스에서 때우는 이른바 교차보조가 폐지된다. 가정용가스비의 인상은 당연하다. 현재 우리나라 가정용 가스비는 OECD 평균의 1/3수준이다. 얼마나 오를지는 상상해보시도록.

의료민영화도 본격 추진된다. 제주도 국내영리병원 허용, 병원채권조달법에 촛불때 막았던 의료민영화 조항을 다 넣은 의료법개정, 여기에 “건강에 대한 상담, 정보 제공, 교육, 점검 및 관찰”을 건강보험에서 제외해서 가격을 자유화하고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 넘겨주겠다는 건강관리서비스법도 소리소문 없이 5월 17일 국회에 상정되었다. 아예 영리병원을 전

국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라는데 뭘 기대할 것인가.

국민연금 개정안도 있다. 이제까지 가입자가 참여하여 연금 운용을 감시하던 것을 가입자를 배제하고 연금운용권을 경제부처가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백조 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가입자들의 감시도 없이 주식시장에 내맡긴다? 현재처럼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국민연금이 하루 아침에 날라갈 수도 있다.

위대한 거부

그러면서도 정부는 성장동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 성장동력 산업은 바로 녹색산업, 서비스산업 등이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산업? 바로 4대강 사업이다. 서비스산업? 바로 교육과 의료의 민영화, 금융 규제 완화를 뜻한다. 건설회사들은 막여살려야 하고 대학들도 먹고 살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 그리고 삼성생명을 빼뜨리면 안된다.

국민들의 “위대한 거부”로 인해 시기 조절은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지는 말자. 또 국민들이 보여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거부의 수혜자가 민주당이라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은행과 건설회사 퍼주기에 대해 민주당이 지금까지 반대를 했던가? 공기업 민영화 방안이나 가스, 발전, 물, 의료 민영화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노무현 정부 때부터의 계획이었다. 이번엔 경인지역에서 야당후보로 유일하게 당선된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는 민주당 한미 FTA 특위 위원장이었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위대한 거부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치적 구심점으로 선택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을 막을 힘도 의지도 없다. 이를 막을 힘은 또 다시 국민들이다. 이번 지방선거로 대중의 보수화에 대한 낙담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또 한번 밝혀졌다. 국민들은 저항의 의지가 있고 이명박 정부를 거부한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의 의지를 조직하고 이끄는 것은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민주당의 몫이 아니다. 국민들이 직접 앞으로 추진될 삭감과 민영화, 반민주적 정책에 맞서야 한다. 이제 다시 신발끈을 다시 한번 조여 매자. 이는 사회운동과 진보정당이 할 일이기도 하다.

민주노조의 손발을 묶는 타임오프제를 막아내야

이명박 정부가 민주노조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노동조합은 자주적 운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노동부장관 임태희)”고 위선을 떨며 진정한 공격의 발톱을 숨겨 왔다. 정부는 타임오프제의 핵심이 노조 전임자 임금을 누가 지급하느냐인 것처럼 연막을 쳤다. 그러나 저들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현장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활동과 노동조합의 기본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다.

얼마 전 경총이 소속 회원사에 보낸 ‘2010년 단체협상 체결 지침’ 등을 보면 이들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경총은 지침서를 통해 “타임오프 한도의 활동 사항과 시간·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계획서를 노동조합이 제출”해야 하고, “전임자의 출퇴근이나 외출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한다고 주문했다.

당장 경총의 지침에 따라, 기아차 사측은 “각종 선거기간, 대의원 및 교육위원 활동까지도 타임오프를 적용해야 한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GM대우차 사측은 아예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전임자 처우와 관련한 단협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사장들의 방향은 분명하다. 이들은 설



사 노동조합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사측이 허락하는 범위로 노조활동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 또, 타임오프 한도를 벗어난 상급단체 활동이나 연대투쟁, 정치투쟁은 철저히 봉쇄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이에 맞선 민주노조 운동 진영의 투쟁이 절실하다. 그 점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근로면제심의위원회에 참가한 것은) 등에 칼이 10센티 꽂히는 것보다 5센티 꽂히는 것이 더 나으니 조금만 꽂아달라고 빌러 들어간 [것]”(박훈

변호사)이라는 비판을 곁들여 봐야 한다.

최근 금속노조가 타임오프제 무력화를 위한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도 6월 23일 파업을 비롯한 총력 투쟁을 벌이고 서울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투쟁 선언’이 더는 공문구가 돼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명박 정부의 민주노조 말살 정책에 맞서 “악법은 어겨서 깨뜨린다”는 노동운동의 전통을 다시금 세워야 한다.

박성환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1년(26개 호) | 5만 원
2년(52개 호) | 10만 원

www.left21.com | left21@left21.com | 02-777-2792
계좌번호(명의: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레프트21

전교조·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하라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구실을 대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 2백20여 명을 파면·해임키로 했다.

정부는 이 노동자들이 헌법 제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와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다. 우리는 한나라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대고 공공연히 집단가입을 호소해 온 고위직 교원·공무원들이 처벌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다.

더구나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는 노동계급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미 세계 여러 국가들은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하위직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은 더 자유로운 편이다.

그런데도 이명박과 보수 언론들은 전교조·공무원노조가 “정치와 단절”하고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가치 중립성”의 실상은 이명박의 친재벌·반민주 정책을 받아들이라는 강요다.

“중립성”

전교조가 잘 지적했듯이, “일제교사를 실시할 것인가,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를 설립할 것인가, 교원 10퍼센트를 퇴출시킬 것인가 등은 모두 교육의 가치와 이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적인 문제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 강요는 노동자들을 정치투쟁과 노동계급 정당에서 떼어내 무력화하려는 시도다.

특히 지금 전교조·공무원노조 마녀사냥은 북풍 몰이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선전하자,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대량 징계방침을 발표했다. 보수 교육감 후보들은 “반(反)전교조” 기치를 내걸고 “이념교육은 안 된다”며 전교조를 몰어뜯었다. 진보진영을 위축시키고 보수층을 결집하려 했던 것이다.

진보 후보들은 옳게도 전교조 방어 입장을 발표했지만, ‘전교조 대 반(反)전교조’ 선거 구도가 불편해 기자회견은 부담스러워 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은 중징계 방침을 두고 “후보로서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고, 박노현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도 “실정법 위반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교사·공무원 탄압 저지 공대위’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전교조·공무원노조 방어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두 명 중 한 명은 전교조 교사 징계에 반대했다.

더구나 전교조 탄압을 지렛대 삼아 MB식 교육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에 맞서려면, 그 핵심 고리인 전교조를 방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진보운동은 “실정법”의 뒤편에서 벗어나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방어에 민주노총을 포함한 진보진영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박설



김미진 기자

한나라당의 반(反)전교조 선거 전략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패배했다. 진보진영의 전교조 방어 운동이 건설돼야 할 때다.

“전교조 지키기는 진보진영의 핵심 과제”

파면·해임 대상인 한 전교조 활동가를 인터뷰했다. 사정상 익명으로 쓴다.

“이번 징계는 한 마디로 야비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조처다. 초고속 징계 절차는 누가 봐도 지방선거용 여론 작전이다. 조전혁 명단공개가 망신살로 귀결되자 급하게 써먹은 조잡한 카드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유죄추정의 원칙’과 ‘마녀사냥식 선행 재판’이라는 반(反)사법적 원리가 작동했다. 교육청은 억울하면 무죄를 스스로 밝히거나 징계 후 나중에 재판 걸어 복직해보라는 태도다. 마치 중세 시대와 조선 시대를 왕복하는 느낌이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는

가? 지난 일주일간 저들은 1백80여 명 교사들의 목숨을 가지고 놀았다.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켜 교육감 선거 등 지방 선거에서 유리한 지형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또 전교조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뿐 아니라, 규약 개정이 8월까지로 예정돼 있는데 지금부터 전교조를 궁지에 몰아 넣어 결국 전교조 비합법화로 가려는 과정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한다.

시국선언이나 정치적 견해의 표현은 공무원·교사가 시민으로서 갖는 보편적인 권리에 바탕을 둔 활동이므로 민주국가라면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탄압이야말로 공무원·교사를 모두 정권의 노예로 만들려는, 파시즘적 권력의 대단히 정치적인 음모다.

공무원·교사를 이처럼 영혼 없는 노예로 만들고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다.

전교조 없는 학교에 희망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교육을 살릴 가장 중요한 교두보는 역시 전교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조가 늘 동네북처럼 얻어터지는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 지키기는 진보진영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고 본다. 최대한의 엄호와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인터뷰 정리 모승훈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정치활동 자유도 부정”

파면·해임자 명단에 포함된 공무원노조 **권정환 국제국장**에게 정부의 탄압 배경과 대응방향을 들어봤다.

“저들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직무상 중립을 말하는 것이지, 헌법에도 보장된 정치활동 자유를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이 논리라면 종교적 중

립을 이유로 공무원들은 주말에 교회에도 나가서는 안 된다.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심지어 근무시간 이후에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정치활동까지 막고 있다.

큰 맥락에서 보자면 이명박 정부는 자신이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정책들에 반대해 온 전교조·공무원노조를 눈엍가시로 여기는 것 같다.

지금 정부는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을 한 묶음으로 탄압하고 있다. 우리도 한 묶음으로 단결해 싸워야 한다. 정부의 공무원·교사 탄압이 성공을 거둔다면 다른 부문에 대한 공격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노총과 각 진보사회단체들의 연대 투쟁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인터뷰 정리 이영일

한나라당 지지는 무죄, 진보정당 지지는 유죄?

김행수 전교조 정책위원

정부는 전교조 교사 1백83명을 파면·해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중 이미 해직된 교사들을 제외하더라도 대상자가 무려 1백69명이다.

그런데, 검찰은 수없이 제기된 친한나라당 교원의 정치 활동 혐의와 정치자금 후원 건은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단 한 명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학교장들이 한해 수백만 원씩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기도 했고, 교장들이 교사들을 일일이 불러 한나라당 의원 후원을 강요하기도 했다.

교사와 교육 공무원들이 한나라당 당원만 할 수 있는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한 경우도 있다. 이 중 한 교원은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뉴라이트 성향 교원노조의 위원장이다.

정치 후원금 기부자(학교장과 교감)					
이름	소속정당	선거구명	성명	직업	기부액
박찬숙	한나라당	비례대표	조OO	OO고 교장	500,000
박찬숙	한나라당	비례대표	조OO	OO고 교장	500,000
박찬숙	한나라당	비례대표	조OO	OO고 교장	500,000
박찬숙	한나라당	비례대표	조OO	OO고 교장	500,000
박찬숙	한나라당	비례대표	조OO	OO고 교장	500,000
박찬숙	한나라당	비례대표	조OO	OO고 교장	500,000
박찬숙	한나라당	비례대표	조OO	OO고 교장	500,000
전여옥	한나라당	영등포갑	문OO	유치원장	5,000,000
김정권	한나라당	김해갑	김OO	유치원장	3,000,000
권철원	한나라당	부산사상	김OO	유치원장	2,000,000
권오을	한나라당	안동시	최OO	OO중 교감	5,000,000
김학송	한나라당	진해시	정OO	OO고 교사	5,000,000

고위직 교원에게만 보장된 정치활동의 자유

교총 산하기관이 대의원대회를 열어 수천 명이 집단적으로 한나라당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주자고 한 일도 있다.

한나라당 의원이 이사인 사립학교에서 교사들의 집단 후원금을 받고 학교 행정실에서 연말정산을 해 주었다는 의혹도 있다.

사학법인협의회가 비밀공문을 통해 시도회비로 할당해 정치자금을 갖다 주기로 한 사례도 있다. 최근 검찰은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의원 시절 교사들에게서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친한나라당 교원단체와 교장 등 교원들이 한나라당에 돈을 갖다 주거나 한나라당에 가입한 사례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기소돼 파면·해임을 앞두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에 비해 금액이 결코 적지도 않고, “죄질”이 가볍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한나라당과 관련된 이런 수많은 사례는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고 아직도 법리 검토중이란단다. 교과부 역시 이들에 대해서 단 한 명도 징계를 입에 올리지 않는다.

특히 이주호 차관은 자신이 교사들한테 정치자금을 받았으면서 한 톨도 받은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

정부는 공권력을 가장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MB 정부, 교과부, 검찰, 한나라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